

EU Brief

| EU 동향 |

- 탈규제 · 친기업 · 시장통합 ‘융커 플랜’의 미래
Deregulation, Pro-Business and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uture of Juncker Plan
- 유럽의 양적완화 배경과 전망
Background and Prospect of European Quantitative Easing
- 영국 총선 이후 英-EU의 관계
UK-EU Relations after UK General Election
- 밀월기에 접어든 EU-중국 관계
EU-China Relations Entering Honeymoon Period
-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과제, 디지털 단일시장
Digital Agenda's Core Task: Digital Single Market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탈규제 · 친기업 · 시장통합 ‘융커 플랜’의 미래 002 Deregulation, Pro-Business and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uture of Juncker Plan
	EU Economy 유럽의 양적완화 배경과 전망 004 Background and Prospect of European Quantitative Easing
	EU Politics 영국 총선 이후 英-EU의 관계 008 UK-EU Relations after UK General Election
	Trade & Investment 밀월기에 접어든 EU-중국 관계 016 EU-China Relations Entering Honeymoon Period
	Industry Trends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과제, 디지털 단일시장 020 Digital Agenda's Core Task: Digital Single Market
	EU Law EU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의의 025 Recent Trends and Significance on ISDS between EU Investors and State
	Social Issues 깊어가는 유럽의 고민: 불법 이민 030 Illegal Immigration to Europe
	Report Review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 037 Economic Impact of Brexit
	EU Centre News 제6기 EU 아카데미 수료식 040 The 6 th EU Academy Completion Ceremony 제6회 EU 논문대회 개최 041 The 6 th EU Student Symposium 제5회 EU 리더십 학생토론대회 042 The 5 th EU Leadership Student Debate Competition 유럽의 날 및 연세 창립 130주년 기념 오찬 043 Europe Day and Yonsei University 130 th Anniversary Commemorative Luncheon 유럽의 날 문화행사 044 Europe Day Festival



탈규제 · 친기업 · 시장통합 ‘융커 플랜’의 미래

Deregulation, Pro-Business and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uture of Juncker Plan

“Team Juncker” is a banner catchphrase hung over the European Commission (EC) building in Brussels. The term, referring to main members of the EC led by the President Jean-Claude Juncker, has been appearing in recent official EU documents. Juncker is the first to use such a popular catchphrase reminiscent of the Hollywood film, Team Avengers.

The nomination of Juncker as the President of the EC in June 2014 was conducted in a new mod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f Lisbon in December 2009, European Parliament (EP) finally grabbed control in the appointment of top level executives, something for which head of each state had previously exercised full authority over in the Council of the EU. The EC officials say it was the first such post elected by the EP. Continued economic difficultie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ombined with a new top level executive election system have resulted in Team Juncker’s large scale investment plan and major market union policy which have recently been exciting EU.

The core of the Juncker Plan is to make an efficient business environment comparable to that of the U.S. by integrating each country’s financial, digital and energy markets. So far, it has been difficult, for example, for a French startup to receive operating funds from a German bank. Western Europe, the buyer, has been repeatedly led by the seller of natural gas, Russia, because energy import negotiations have been carried out by each country separately. However, the plan is to offer more business opportunities t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rough union or integration. Creating a business environment comparable to Silicon Valley or New York is a point of emphasis among the EC officials recently.

The ultimate goal of the Juncker Plan, which can be summarised as deregulation and pro-business policies, is the increase of employment and economic recovery. The plan aims to foster ‘European Champion’ businesses comparable to Google, Apple and Facebook in a broader

market. Such a trend is deeply related with a long-term hostility to global online companies from Silicon Valley. The logic is to create an environment similar to that of the enemy in order to defeat the enemy.

Criticism of the plan is also common. The investment plan of 315 billion Euros looks enormous. However, if EU public funds, amounting to 21 billion Euros of seed money, can attract private fund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the plan can come close to expectations through the multiplier effect. How the market will respond is unknown. For the multiplier effect to be valid, Juncker’s Capital Market Union plan should shape the investment environment first, yet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untries cannot guarantee the time.

There is significant fear that a single market can lead into the development of monopolies as well. For large communication network companies like German Deutsche Telekom or French Orange, the plan i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market to small Eastern European countries. However, it can also threaten the survival of companies in such small countries. Considering how the Energy Alliance was downsized from originally a radical agenda empowering negotiation right to such moderate issue as greenhouse gas emissions, concerns can definitely impact the course of plan.

Juncker’s EC plans to present the relevant plan to the EP by the end of 2016. The EP will legalise it through 18 to 24 months of review period. Given that President Juncker’s term finishes in 2019, time is insufficient for the task. In the digital and financial markets, where the trends change in months, the system being legislated may not be efficient years later.

The EC is desperate to revive the economy, as EU members are cautious of the crisis.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their experiments will bring to the European market that has been traditionally much more conservative than the U.S. market. ★

Ilido Hwang, a reporter at DongA Ilbo

‘팀 융커(Team Juncker),’ 브뤼셀 EU집행위 청사에 걸린 현수막 구호다. 2014년 11월 취임한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이 이끄는 집행위 주요 멤버를 일컫는 이 말은 최근 EU의 공문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할리우드 영화 <어벤저스(Team Avengers)>를 연상케 하는 이 같은 대중적인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는 것은 융커 위원장이 처음이다.

주지하다시피 2014년 6월 이뤄진 융커 위원장 지명은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이전에는 EU 이사회에서 각국 정상이 전권을 행사하던 수뇌부 임명에 유럽의회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의회가 EU집행위원장을 선출한 사실상 최초의 선거’라고 집행위 관계자들은 말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달라진 수뇌부 선출 시스템의 결합, 그 결과가 최근 EU를 달구고 있는 ‘팀 융커’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주요 시장 통합 정책이다.

‘융커 플랜’의 핵심은 각국의 금융 · 디지털 · 에너지 시장 등을 통합해 미국에 필적하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금은 프랑스의 스타트업이 독일 은행에서 운영자금 투자를 받기 어렵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협상이 나라별로 각각 진행되다 보니 구매자인 서유럽이 판매자인 러시아에 끌려다니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시장을 통합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나 뉴욕 같은 사업 환경’이라는 말은 최근 집행위 관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탈규제 · 친기업으로 요약되는 융커 플랜의 최종 목표는 물론 고용 증대와 경기회복이다. 더 넓은 시장을 기반으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에 필적하는 ‘유러피언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이러한 흐름은 실리콘밸리에서 온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유럽이 가진 오랜 반감과도 관계가 깊다. 적들을 꺾기 위해 적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든다는 논리다. 물론 비판도 만만치 않다. 3,15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계획은 일견 엄청나 보이지만, EU 공적

자금 210억 유로를 종잣돈 삼아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승수효과를 거치면 그 정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치에 가깝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승수효과가 활성화하려면 융커 플랜의 한 축인 자본시장통합(Capital Market Union) 계획이 궤도에 올라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자본시장 통합을 둘러싸고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탓에 속도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하나의 단일시장은 곧 하나의 독점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만만치 않다. 독일 도이체텔레콤이나 프랑스 오랑주 같은 대형 통신망 사업자에게는 동유럽 소국 구석구석까지 시장을 넓힐 기회지만 작은 나라 입장에서 는 자국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당초 융커 플랜의 핵심 프로젝트였던 에너지동맹의 주요 과제가 협상권 위임 같은 급진적인 어젠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같은 온건한 이슈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융커 집행위는 대략 2016년 말까지 관련 계획안을 완성해 유럽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회는 2년, 빠르면 18개월의 검토기간을 거쳐 입법화한다. 융커 위원장 임기가 2019년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월 단위로 시장판도가 변하는 디지털 · 금융 시장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제도가 수년 뒤에 유효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유럽 각국의 위기의식이 상당한 만큼 경제를 살리겠다는 EU집행위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이다. 28개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구심력과 엇갈리는 이해관계라는 원심력 사이에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융커 집행위에게 떨어진 임무다. 이들의 실험이 유럽에 어떤 미래를 선사할지, 미국 시장에 비해 더없이 보수적이던 유럽 시장의 분위기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

황일도 (주)동아일보사 기자 · 동서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유럽의 양적완화 배경과 전망

Background and Prospect of European Quantitative Easing

The ECB released a quantitative easing (QE) policy beyond market expectation in the monetary policy meeting held on January 22, 2015. The policy is to purchase 1.14 trillion Euros worth of assets, specifically 60 billion Euros worth of assets monthly for at least 19 months from March 2015. This is the equivalent to 11.5% of Eurozone GDP, and is far bigger than expected by the market (50 billion Euros per month for a year). This report explains the background and prospect of such a large scale QE.

ECB,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완화 시행

ECB(유럽중앙은행)는 지난 1월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3월부터 최소한 2016년 9월까지 총 19개월 동안 매월 600억 유로씩 총 1조 1,4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로존 GDP의 11.5%에 이르는 규모로, 시장에서 예상한 1년간 매월 500억 유로보다 훨씬 큰 규모다.

매월 매입하는 600억 유로의 자산은 회원국 국채 450억 유로, EU 기관이 발행한 채권 50억 유로, 시행 중인 커버드본드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매입 100억 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EU 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위험은 회원국이 공유하기로 한 반면, 국채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하기로 하여 투자위험을 개별 회원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그리스 국채도 매입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3월부터 시작된 ECB의 양적완화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산 매입 규모는 총 1,686억 유로로 ECB가 목표로 설정한 총 매입액의 15%인데, 이 가운데

★ ECB의 양적완화정책 시행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기간	ABS	커버드본드	국채	합계
3월	1,161	12,397	47,356	60,914
4월	1,161	11,464	47,700	60,325
5월	445	7,735	39,168	47,348
합계	2,767 (1.6%)	31,596 (18.7%)	134,224 (79.6%)	168,587 (100%)

주: 5월은 5월 1일 ~ 22일 중 매입 규모
자료: ECB

국채가 1,342억 유로로 79.6%를 차지하고 커버드본드가 316억 유로로 18.7%, ABS가 28억 유로로 1.6%이다.

양적완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금리를 주로 사용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에 가깝게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되자 말 그대로 '시중의 돈을 늘리는' 양적완화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양적완화정책은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일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중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액'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친 나라는 미국이다.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0~0.25%) 시대로 진입한 데 이어 초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미 FRB는 3차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대규모로 매입했다. 그 결과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2014년 10월 말 마침내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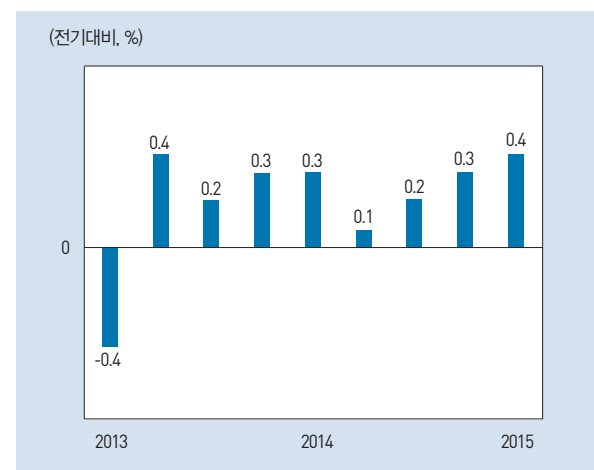
반면, 유럽은 양적완화에 다소 소극적인 편이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ECB가 정책금리를 내리고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2012년 이후 LTRO의 대출금이 상환되면서 ECB의 자산규모가 감소하기도 했다. 유럽이 거듭된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유로존 회원국의 입장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은 ECB가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독일 등은 채권 매입 조건으로 재정위기국에 긴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ECB의 이번 양적완화정책 시행은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해 회원국들이 첨예한 의견 차를 어는 정도 극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유럽 경제의 부진이 양적완화의 배경

그렇다면 경제상황이 대조적이고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부담과 혜택도 뚜렷이 차이가 나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더욱 적극적인 형태의 양적완화정책에 합의한 배경은 무엇일까? 당연히 유럽 경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경제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지속해서 부진한 상태를 이어왔다.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던 유로존은 2013년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2014년에도 성장세가 미약하여 경제회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11%가 넘는 높은 실업률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경기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

★ 유로존 경제성장률



자료: Oxford Economics

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급감한 것도 유로존 경제 부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가 하락과 함께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진 것도 큰 부담이다. 유로존의 전년동기 대비 소비자물가는 2013년 10월부터 1%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다가 2014년 12월부터는 하락세로 진입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불황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형성되면 가계는 소비를 미래로 이연하여 현재 소비가 더욱 감소한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위축 → 실업 증가 → 가계소득 감소 → 소비 위축'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deflation trap)하게 되고, 기업과 가계의 실질부채부담이 증가하여 파산위험이 높아지며 금융기관의 손실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경기부진과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 ECB가 추진한 기존의 금융완화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CB는 2014년 6월부터 두 차례 금리를 인하여 기준금리를 실질적으로 제로 수준인 0.05%로 낮추었고,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 확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1조 유로의 유동성 공급을 목표로 초저금리 장기 은행대출(TLTRO)(2014년 6월)과 ABS 등 민간채권 매입에 착수한 것이다. TLTRO를 통해서 최대 4,000억 유로의 장기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여 기업 및 가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말 기준으로 당초 계획의 53% 수준인 2,120억 유로의 대출에 그쳤다.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위험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유로존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은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위험이다. 구제금융 없이는 디폴트가 불가피한 그리스는 긴축, 구조조정 등의 지원조건을 두고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은행 등의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줄었다고 해도 그리스 사태는 유럽의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예민한 뇌관이다. 다소 잠잠해졌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로 인한 러시아와의 갈등과 수출 감소 등도 유로존에는 큰 불안요인이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로존 경제의 회복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CB가 양적완화 카드를 과감히 빼든 데에는 이처럼 불안한 경제상황에 대한 고려도 한몫하고 있다.

양적완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양적완화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었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는 자산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의 가장 뚜렷한 효과는 유로화 약세다. 1999년 1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2015년 5월 27일까지 유로화 평균 환율은 1.22달러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월부터의 평균 환율은 1.35달러로 유로화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14년 5월 초부터 약세를 보여온 유로화는 ECB의 양적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2014년 중반 이후부터 환율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5월 27일 현재 유로화 환율은 1.09달러로 직전 최고치인 2014년 3월 18일의 1.39달러에 비해 22%나 하락했고, 2015년 초의 1.21달러와 비교해도 9.9%나 하락했다.

물론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것은 미국이 2015년 중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하지만 유로화는 양적완화의 효과로 달려뿐만 아니라 파운드, 위안, 엔, 원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27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비해 14.4% 하락했고,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REER: Real Effective Exchange Rate)도 2015년 4월 기준으로 2014년 초 대비 13.8% 절하되었다.

유로화 약세로 유럽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혜택을 얻고 있다. 비유로존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기계, 화학, 의약품 등의 분야가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BMW, 다임러, 폭스바겐 등 미국 판매 비중이 높은 자동차회사는 물론 사노피와 바이엘 등 유럽 의약품 업체들과 유럽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도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1/4분기 경영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유로화 약세는 호텔과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은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미국인들이 세 번째(비중 17%)로 선호하는 관광지인데, 지난 3월에 미국인 관광객이 4.2% 증가했다. 그 덕분에 화장품 브랜드 ‘랑콤’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로레알은 2015년 1/4분기 매출이 14% 증가했고, 루이비통도 매출이 13% 늘었다. 반면, 비유로존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가전, 의류 등 소비재산업과 전자, 금속 및 금속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 중간재 산업에는 유로화 약세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비해 비유로존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이 유로화 약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의 효과는 경제지표에서도 나타난다. 2015년 1/4분기 유로존 GDP는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는데, 2014년 2/4분기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후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과 함께 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그동안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양적완화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유로존의 경기개선을 반영하여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다. IMF는 2015년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1.5%로 올렸고, OECD는 1.1%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또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5월 0.3% 상승했는데,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6개월 만의 일이다. ECB는 2015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에서 0.3%로 상향조정하면서 2016년 물가상승률을 1.5%로 내다봤다. EU 서베이에 따르면,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도 1월 1.5%에서 4월 1.82%로 상승했다. 이처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고 있는 것도 양적완화 효과로 볼 수 있다.

전망과 시사점

경제회복과 함께 ECB의 양적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지난 5월 중순 자산가격 버블 우려 등으로 국제금리가 급등하자, 5월 19일 브누와 쿼레 ECB 집행이사는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전통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5, 6월에 국채를 추가 매입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금리 상승과 유로화 강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5월 20일 크리스티앙 노이에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ECB는 필요하다면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ECB는 양적완화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양적완화 지속으로 유로화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여 달러와 가치가 같아지는 ‘달러-유로 패리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월 25일 기준으로 14개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유로화 환율 전망치의 평균은 3개월 후 1.04달러, 6개월 후 1.02달러, 12개월 후 0.99달러이다. 대부분의 투자은행들도 유로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화 약세와 함께 유럽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1/4분기 경제회복에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기여도가 커질 전망이다. 실업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어서 임금상승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는 기업의 수익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저유가와 일부 국가의 건축 완화도 유럽 경제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리스크도 남아 있다. 성장궤도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각국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하고, 그리스 사태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의 충격이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BoA는 그렉시트(Grexit) 발생 시 유로존의 성장률이 1.0%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와 상승도 리스크 요인이다. 채권시장 투매 등으로 5월 중순에 이어 6월에도 독일 등의 국제금리가 급등했는데, 이처럼 국제금리가 급등한 것은 ECB의 양적완화로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판단과 함께 경제지표가 개선되어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점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지금은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경기를 비롯하여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ECB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이다.

한편, ECB의 양적완화는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조치를 촉발하고 있다. 유로화 약세가 자국의 수출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비유로화 사용 유럽 국가는 물론, 싱가포르, 호주, 인도, 터키 등 비유럽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환율제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ECB의 양적완화로 유럽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반가운 일이지만, 유로화 약세, 즉 원화의 상대적 강세 지속에 따른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일부 기업은 수출물량마저 감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CB의 양적완화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므로 유로화 약세 역시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유럽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부품 현지조달 확대 등 현지 완결형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기업들은 신시장 개척과 원가 절감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은 물론 결제통화 다변화 등 유로화 약세로 인한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영국 총선 이후 英-EU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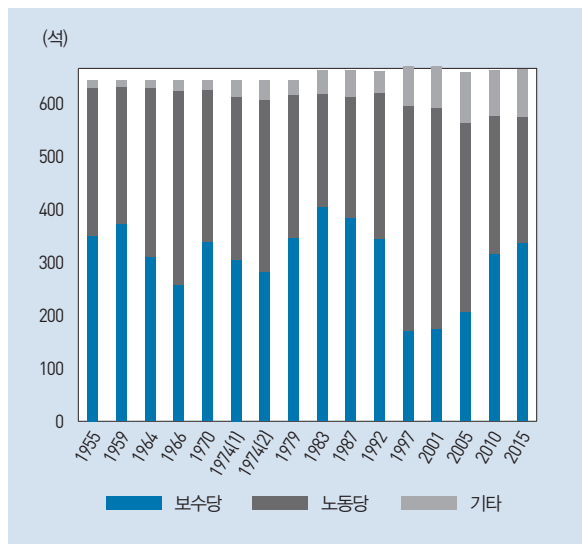
UK-EU Relations after UK General Election

In the UK general election held in May 2015, the Conservative Party once again dominated and the risk of Brexit (British exit from the EU) has become higher. The Conservative Party won 306 seats in the 2010 general election, which was less than the 325 required for a majority in the parliament, so the party had formed a coalition with the Liberal Democrats. However, this time the party gained 331 seats, more than enough for a majority in the parliament. In this regard, it is presumed that the Conservative Party will attempt to negotiate terms with the EU, and protracted negotiations may function as an instability factor to the world economy.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수당

2015년 5월 실시한 영국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2010년 총선에서는 보수당이 의석의 과반(325석) 미만인 306석을 차지하면서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구성했으나 이번에는 331석을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달성하였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지지율이 1%p 또는 10석 내외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용한 보수당 지지자(shy Tory)'¹의 영향으로 격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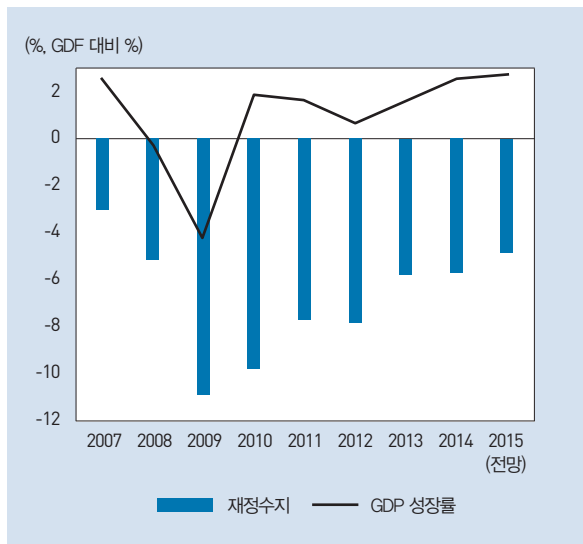
★ 영국 총선 결과



자료: House of Commons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 보수당이 지난 5년간 추진한 경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4년 영국은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영국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



자료: IMF, WEO.

1 조용한 보수당 지지자: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 의지를 숨기거나 마지막 순간에 보수당을 지지하는 스윙보터를 의미. 1992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격차가 1%p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보수당이 336석을 확보하며 노동당과 65석(득표율 7.5%p)의 격차를 보이자 생겨난 용어

영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정책과 친(親)시장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리스크가 높아졌다.

브렉시트 리스크가 재점화

2013년부터 보수당은 EU 통합회의주의(Eurosceptic) 기조를 강화하였다. 유럽 전반에서 극우세력이 득세하자² 보수당은 지지세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며 강도 높은 EU 통합회의주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 이전에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³ 2015년 하반기에 국민투표 시행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⁴

보수당은 1997~2010년 노동당 집권 시기에 영국의 권한이 EU에 과도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년 3월 EU와 협상을 추진할 분야(브뤼셀로부터 권한 회복, '회원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EU 법안을 공동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유럽의 규제로부터 기업을 보호', '유럽 기관의 개입 없이 영국의 경찰과 사법제도가 국민을 보호', '무로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동', '보다 긴밀한 연합' 개념 제정)을 제시하였다.

보수당은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EU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이 승리하자⁵ EU와 협상할 정책을 일부 구체화하였다. 2014년 10월 보수당은 유럽인권보호법 대신 영국 별개의 인권법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⁷ 보수당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재소자의 투표 권리 및 인공수정 권리,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영국 거주 권리를 부여한 것과 살인자들에게 종신형 선고를 금지한 판결에 불만을

표명하였다. 또한 2014년 11월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최소 4년간 거주하며 경제에 기여한 유럽 이민자들에게만 세액공제와 자녀수당을 제공하고, 자녀가 영국 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자녀수당 및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5년 4월 보수당은 매니페스토를 발표하며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였다.⁸

향후 영국과 EU의 협상이 진행되며 브렉시트 리스크가 고조될 전망이다. 2015년 5월 기준 EU 잔류를 희망하는 여론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총선 당시 나타난 영국의 정치판도 변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등당선제(First past the post)하에서 EU 탈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국독립당이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나 지지율은 3위인 12.6%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2015년 영국 총선에서와 같이 EU 탈퇴 국민투표에서도 '조용한 보수 유권자'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는 EU 탈퇴에 대해 의견이 없는 유권자가 다수인 상황이다.

2015년 총선에서 강경 보수당 의원들이 선전한 가운데 '개혁된 EU'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캐머런 총리가 진퇴양난에 빠질 소지가 크다. 모든 개별 EU 법안에 대한 거부권 확보 등 강력한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보수당 의원이 최대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보수당 의석수가 전체 과반보다 6석 많은 수준에 불과해 소수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고 당내 반대세력(rebel)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영국과 EU의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으로 복잡다단해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적 배경: 동상이몽(同床異夢)

유럽 공동체 설립 초기단계부터 영국의 목적은 독일, 프랑스와 상이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평화 유지를 위해 유럽 통합을 추진하였다. 1951년 독일,

2 The Eurosceptic Union. (2014.5.31). *The Economist*.

3 런던에 위치한 블룸버그 유럽 본사에서 발표해 '블룸버그 연설'로 불림

4 2013년 5월 2017년 말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한 법안(Bill 15 of 2014-15)을 발표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부결

5 1957년에 체결된 유럽경제공동체 로마 조약 서문에 'ever-closer union'이라는 문구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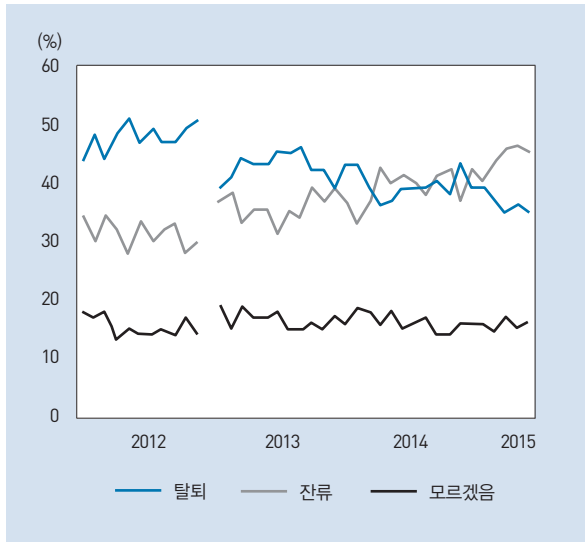
6 2014년 EU의회 선거 결과: 영국독립당 24석, 노동당 20석, 보수당 19석

7 Conservatives (2014).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UK: The Conservatives' proposals for changing Britain's Human Rights Law.

8 Conservatives (2015). Strong leadership. A clear economic plan. A brighter, more secure future.

9 과거 캐머런 총리는 이 같은 조치가 EU 탈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거부(David Cameron launches charm offensive to head off Right-wing rebel Tory MPs. (2015.5.9). *The Telegraph*.)

★ EU 잔류 및 탈퇴 여론조사



자료: Yougov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등 6개국은 미래의 전쟁을 막기 위해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하는 공동체(ECSC)를 설립하였다. 당시 영국은 ECSC 가입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폐허가 된 유럽 대륙과의 통합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ECSC 설립을 주도한 장 모네 프랑스 재무장관은 “영국의 가입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영국이 전쟁 승리 이후 아무 변화 없이 당시 가진 것만을 유지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졌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¹⁰

1957년 ECSC 회원국들은 로마 조약에 합의하며 공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였다. 1960년대 독일과 프랑스가 전후 경제부흥을 달성하자 1961년과 1967년에 영국이 EEC 가입을 시도했으나 프랑스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되었다. 당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973년 세 번째 시도를 통해

영국은 EEC에 가입했으며,¹¹ 1975년 국민투표¹²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EEC 잔류¹³를 결정하였다.

한편, 1980년대 EEC 예산 부담과 유럽 통합 수준에 대한 마찰로 영국과 EEC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초 대처 총리는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EEC 예산 규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영국의 1인당 GDP는 EEC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영국의 EEC 예산에 대한 순 기여 규모는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영국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며 농업 비중이 낮아진 가운데 EEC 예산 지출의 70%가 농업 보조금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 협상을 통해 영국 정부는 예산환급금 확보에 성공하였고, EU는 영국의 예산 순 기여 규모의 66%를 환급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1979년 유럽통화제도를 설립하며 통화 통합이 시작되었고, 1987년 ‘1992년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 단일유럽법이 발효되는 등 ‘공동시장’을 넘어 ‘단일시장’¹⁴ 구축이 본격화되자 영국 보수세력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더불어 신(新)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 대처 총리는 사회주의 성향의 프랑스 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는 것과 영국의 주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1988년 대처 총리는 ‘브루제 연설’에서 “영국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의 초국가정부(super state)가 새로운 지배력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1990년대에는 보수당 내에서 영국의 대(對)유럽 정책 기조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었다. 1990년 정부의 강경한 반(反)EU 기조에 반대하는 하우 부총리가 사임하며 당내 분열이 심화되자 대처 총리도 사임을 결정하였다.

¹¹ 1969년 드골 대통령의 사임 이후 퐁피두 대통령이 영국의 EEC 가입에 동의
¹² 1970년대 초 노동당 내 진보성향이 강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당이 영국에 불리한 협상을 했다면 EEC 가입으로 인해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 1974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E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매니페스토에 포함시켰고, 1975년 총선 승리 이후 시행
¹³ 유권자의 67.2%가 EEC 잔류를 지지했으며, 32.8%가 반대
¹⁴ 단일시장은 공동시장의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에 더해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과 ‘초국가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포함하는 경제통합 단계를 의미

¹⁰ Britain and the EU: A long and rocky relationship. (2014.4.1). BBC News.

★ EU의 권한(competence) 분야

조약(서명 연도)	EU의 권한
로마 조약(1957년)	관세동맹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산업정책 인력,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농업정책 공동운송정책 경쟁법 경제정책 조정 공동시장 유럽사회기금 유럽투자은행
단일유럽법(1986년)	단일시장 환경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 및 내무 경제통화연합 교육 문화 협력 및 개발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	고용 사회정책 차별
리스본 조약(2007년)	우주 에너지 국민 보호 데이터 보호 스포츠

주: EU의 권한은 ‘배타적 권한’, ‘공유 권한’, ‘회원국의 행동 지원, 협조, 보완권한’, ‘조정 권한’으로 구분되며 권한 범위에 따라 EU 및 개별 회원국이 법적 효력을 지닌 법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
자료: UK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012). Review of the balance of competence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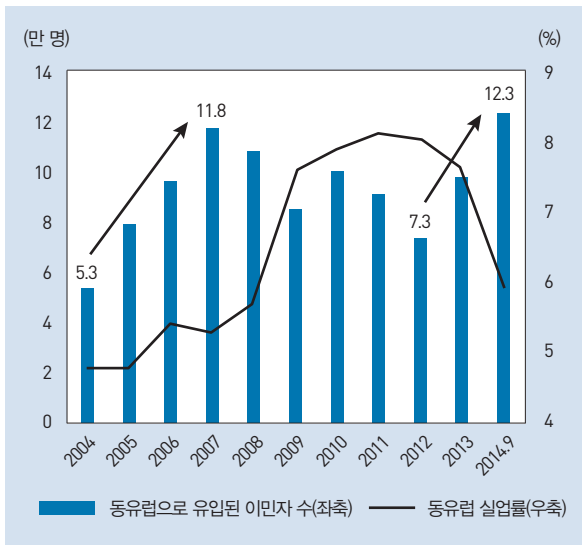
이어 메이저 총리가 추진한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영국 비준 과정에서 반EU 성향의 보수당 의원들이 항명표를 행사하며 보수당 내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1993년 7월 22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회분야 조항에 대한 정부안이 찬성 316석, 반대 324표로 부결되자 다음날 메이저 총리는 재투표가 내각 신임투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당내 반EU 세력을 압박하였고, 수정안이 찬성 339석, 반대 299석으로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EU 정책을 둘러싼 보수당의 분열은 1997년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7~2010년 노동당 집권하에서 영국과 EU의 밀월이 시작되었고, EU의 정치적, 제도적 통합과 동진(東進) 정책이 가속화되었다. 노동당은 1997년 총선 매니페스토에서 EU의 통합 심화 및 확장 정책을 지지하였다. 1997년 블레어 총리는 이전 정권이 예외 조항으로 다룬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회분야 조항을 수용하였고,

영국 의회는 1998년 암스테르담 조약, 2001년 니스 조약, 2008년 리스본 조약을 문제없이 비준했다. 이 기간 동안 EU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펼치며 회원국 수가 1999년 15개에서 2004년 25개, 2007년 27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보수당이 집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EU와의 정치적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실업률이 급증하자 보수당은 과거 EU의 확장 정책으로 동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을 문제삼았다. 2014년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인력들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며,¹⁵ 영국으로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¹⁶ 또한 유로존 재정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1년 12월에는 EU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재정협약’에 대해 영국이 단독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동유럽으로 유입된 이민자 수 및 동유럽 실업률



주: 2005년 이후 가입한 EU 회원국
자료: UK ONS

¹⁵ 영국은 2007년 EU에 가입한 두 국가에 대한 노동시장 개방을 7년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¹⁶ UK ONS (2015). Bulgarian and Romanian migration to the UK.

경제적 배경: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EU 탈퇴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은 유럽 통합이 영국의 경제 및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교역] EU 회원국은 EU 단일재화시장에서 관세 없이 교역을 하고 있으며, EU가 체결한 45개의特惠무역 협정을 활용하고 있다. 탈퇴 반대세력은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한다면 EU의 최혜국대우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영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FTA 추진력이 EU보다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탈퇴 지지세력은 EU의 최혜국대우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이며, 영국이 더욱 개방적인 FTA를 단기간 내에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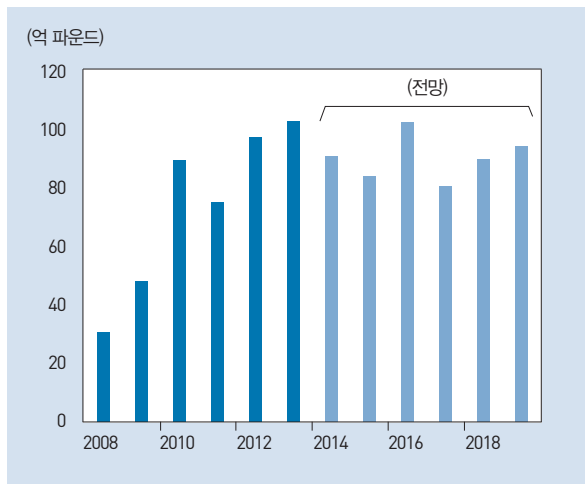
[이민] EU 회원국 국민은 역내 회원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도 무제한이다. 탈퇴 반대세력은 동유럽 인력이 영국인들이 회피하는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납부하는 세금이 복지혜택 규모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영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탈퇴 지지세력은 저임금의 동유럽 인력이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에서 영국인들을 대체하며 임금의 하향압박을 주도하고 있고, 향후 이민자 고령화 및 자녀 수 증가로 복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 EU는 상품 기준, 근로자 계약 조건, 건강안전, 경쟁법, 소비자 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법률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탈퇴 반대세력은 규제 및 기준 통일이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키고, 단일시장에서 규제 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개별 정부의 대응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탈퇴 지지세력은 EU의 노동 시장 규제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EU의 금융업 규제 강화 추세가 금융 중심지인 런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 EU 회원국들은 국민총소득,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배분율에 따라 EU 운영예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독일에 이어 영국의 EU

예산 순 기여액이 가장 큰데, 탈퇴 반대세력은 EU 예산이 유럽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투입되어 영국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반면, 탈퇴 지지세력은 1973~2012년 영국이 EU 예산에 순 기여한 규모(실질)가 총 1,340억 파운드에 달하며, 최근 영국 경제가 선방하며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영국의 EU 예산 순 기여액



자료: HM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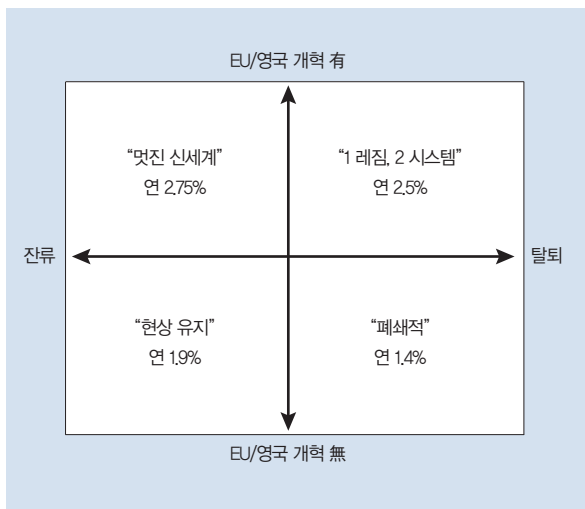
영국의 EU 참여 및 탈퇴에 따르는 순 편익 계산 결과는 신뢰성이 낮다. 이는 연구 발주처의 정치적 의도와 그에 따른 가정이 내포되어 있어 결과의 범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걸쳐 큰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¹⁷ 2014년 8월 보수당 핵심 인물인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¹⁸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개혁된 EU'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등 현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¹⁷ 예를 들어, 영국독립당(2010년) -5% ~ 기업혁신기술부(2010년) +6%

¹⁸ 차기 보수당 대표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보리스 존슨은 2001년, 2005년 총선, 2008년, 2012년 런던시장 선거에서 승리. 2015년 총선에 출마해 50.2%의 득표율로 승리. 캐머런 총리는 존슨 시장이 2016년까지 시장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장관직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나 정치 내각 참석을 요청

영국 하원도서관 연구진은 "EU 참여에 따르는 비용 및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며, 무형적이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다.¹⁹ 또한 탈퇴 이후 영국 정부가 각 분야에 어떤 정책을 도입하여 탈퇴에 따르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지도 불확실하다.

★ 시나리오별 런던의 장기 경제성장률



자료: Mayor of London (2014), The Europe report: A win-win situation.

전개 방향: 첩첩산중(疊疊山中)

2015년 5월 현재 '이민 정책'과 '인권법 관련 권한 회복'을 제외하고는 보수당이 EU에 개혁을 요구할 세부 정책에 대해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총선 이전 강경파 보수당 의원들과 연정 파트너인 친유럽 성향의 자유민주당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 개괄적인 협상 분야만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수당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강도 및 범위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안의 개정만으로는 어려우며, EU조약의 개정이

¹⁹ House of Commons Library (2013), Leaving the EU.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개혁안은 보조법의 형태로 단기간 내에 도입할 수 있으나, 일부는 EU조약 개정이 필요하다.

2017년 말 이전에 EU조약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더라도 개정안 도입 시점은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조약 개정은 EU 회원국 수반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며, 결정 이후 각국 의회 및 국민투표를 통한 비준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²⁰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하게 되면 영국은 EU와 탈퇴 과정 및 탈퇴 이후 양측 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²¹ 영국에서 EU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되면 영국 정부는 EU에 탈퇴 의도를 통지하고, EU와 탈퇴 과정에 대한 협정 교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 보수당 정부의 개혁 추진 분야와 EU조약 개정 필요 여부

개혁 추진 분야	EU조약 개정 필요 여부
브뤼셀로부터 권한 회복	에너지 정책, 공동농업정책, 공동어업정책 등은 현재 EU조약 상에서 협상이 가능하나 사회 및 고용정책 등은 EU조약의 개정이 필요
회원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EU 법안을 공동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EU조약의 개정이 필요
유럽의 규제로부터 기업을 보호	EU의 개별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
유럽 기관의 개입 없이 영국의 경찰과 사법제도가 국민을 보호	영국이 이미 경찰 및 사법 정책 분야에서 광범위한 선택적 이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서 이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조약의 개정이 필요
무료 복지가 아닌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동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EU의 기본 원칙으로 EU조약의 개정이 필요
'보다 긴밀한 연합' 개념 제거	EU조약의 개정이 필요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2015), Reforming the EU: UK Plans, proposals and prospects.

²⁰ 유럽연합조약(TEU) 제48조

²¹ 유럽연합조약(TEU) 제50조

영국과 EU 관계의 제도적 복잡성을 고려해보면 탈퇴협정 마련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맺는 탈퇴협정의 발효일 또는 탈퇴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에도 탈퇴 의도 통지 후 2년째 되는 시기부터 영국은 EU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탈퇴 이후 영국 정부는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모델’ 및 ‘유럽경제지역(EEA)²² 모델’ 또는 ‘독자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험정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단일시장과 유사성이 높은 스위스 모델 또는 EEA 모델 도입 시 EU 탈퇴에 따른 영국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 내 정책 결정권한이 제한적인 두 모델 도입에 대한 반대로 인해 영국과 EU가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 EU 내 혜택, 권한 및 자율성 비교

	EU 회원국	EEA 회원국	스위스	비특혜 국가
자유로운 재화 교역(관세) 혜택				
자유로운 재화 교역(비관세) 혜택				
자유로운 서비스 교역 혜택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 혜택				
비EU 국가와 교역협정 체결 권한				
EU 법안 및 규제 설정 권한				
EU 법안 및 규제 도입 의무				
EU 예산 기여 의무				

주: 색깔이 진할수록 혜택, 권한 및 자율성이 큰 것을 의미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2013), The Economic impact of EU membership on the UK.

²² EEA는 1994년 EU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3개국이 체결한 단일 통합시장 모델

협상과정이 장기화

2015년 하반기부터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EU와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총선 이후 영국 정부는 경제적·정치적으로 자신감이 가득하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4년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로 등극했다. 무엇보다도 2015년 보수당은 1992년 이후 23년 만에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내 개혁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시기를 2016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수당 내 반EU 강경파들은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하고 EU와의 협상을 최소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EU의 근간을 흔드는 분야에서의 조약 개정 가능성을 배제한 상황이다.²³ 주요국들은 EU 통합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국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정부는 최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조약 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할 전망이다.

영국 보수당과 EU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보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1년 영국의 재정협약 거부권 행사 이후 유로존 회원국들은 영국을 ‘불이 난 건물에서 아무 피해 없이 혼자 도망간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개혁 협상 결과, 보수당 내 강경파와 국민의 시각, 탈퇴 현실화 시 탈퇴협정 및 새로운 관계 협정 내용 등이 모두 불확실한 상황이다. EU조약의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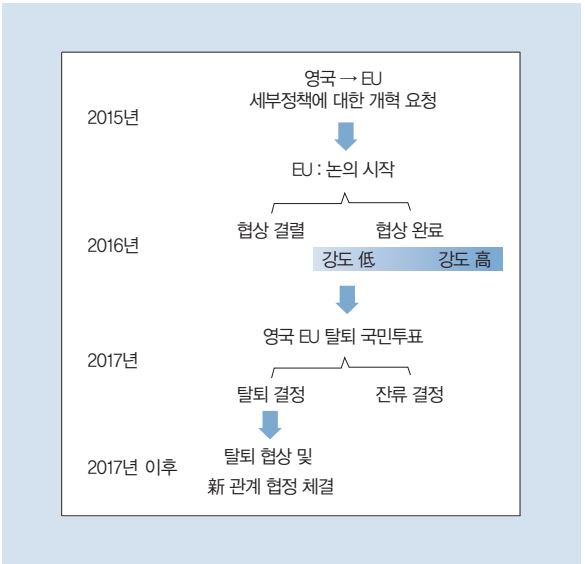
²³ 독일 메르켈 총리: “EU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권한을 침해하느니 영국의 EU 탈퇴를 받아들이겠다.” (Germany ‘would accept UK exit from EU’ to protect migration rules, (2014.11.3.), BBC News.); 헝가리 서블치 타카츠 EU 장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EU가 달성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레드라인’(협상 한계선)이다. 우리는 헝가리 노동자들이 이민자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EU 시민이다.”(UK urged not to meddle on migrant rights, (2015.5.11), Financial Times.)

정부와 EU가 개별 법안 개정 및 선택적 이탈권(opt-out) 부여에 대해 어느 정도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영국 내에서는 EU 잔류 및 탈퇴의 편익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과 EU 간 협상 과정이 장기화되며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슈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당분간 ‘신발에 붙은 찌꺼기’ 같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영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브렉시트 스케줄





밀월기에 접어든 EU-중국 관계

EU-China Relations Entering Honeymoon Period

Year 2015 celebrates the 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EU and China.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twists and turns during the 40 years since formal diplomatic ties were established between China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forerunner of the EC) in May 6, 1975, mutual relations are expected to gradually develop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biggest driving force between the EU and China has been derived from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although they have mutually recognised the need for political and strategic cooperation.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EU and China in 2014 reached 465.7 billion Euros, which is 250 times larger than at the time of the first diplomacy in 1975. The share of the EU's exports to China was 3.5% while imports from China accounted for 6.7%.

‘불혹(不惑)’의 나이에 접어든 양자관계

2015년은 EU와 중국이 수교한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1975년 5월 6일 중국과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가 정식 수교한 이후 40년을 경과하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양자관계는 전반적으로 대화와 협력이 주류를 이루며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역사였다고 평가된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강대국 외교의 주요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중국은 미·일로부터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입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속도를 올렸다. 이 와중에 EU는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압박조치 중 하나로 ‘무기금수조치(Arms Embargo)’를 취하며 서방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했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야 중국 외교에서 유럽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의 ‘단극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라는 당위성이 양자를 전략적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중국은 국제질서의 ‘민주화’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유럽은 인권, 법치, 다자주의 등을 표방하는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 재부상하고자 하였다.¹ 이는 중국-EU 양자관계의 성격이 1998년 ‘협력 동반자 관계’, 2001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점차 격상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EU는 단일 정치체로서 통일된 대중국 정책을 구사하기보다는 개별 국가별로 중국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대중국 ‘무기수출 금수조치’ 철회 논의가 EU 개별 회원국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된 사례에 잘 반영되고 있다.² 중국 또한 EU라는 단일 체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개별 국가별로 분리 접근하는 외교행태를 보였다. 이는 중국 지도자의 유럽 방문이 국가주석이 아닌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주로 수행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EU-중국 간 전략적 협력 어젠다 2020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 마련과³ 2014년 시진핑의 유럽 방문을 계기로 EU와 중국의 관계는 새로운 밀월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해 EU를 포괄적 협력 대상으로 상정하고, 양자 간 미래 협력 어젠다를 제도화하는 단계로 발전된 것이다. ‘협력 어젠다 2020’은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 지속가능 발전, 인문교류’ 등 4대 분야 협력 어젠다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2014년 시진핑은 국가주석 으로서는 처음으로 EU 본부(브뤼셀)를 방문해 ‘평화, 성장, 개혁, 문명의 4대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양자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² 박선희 (2012). “EU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대중국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207-229.

³ European Union (2013.11.23). EU-China 2020 Strategic Agenda for Cooperation.

¹ Ian Manners (2001). Normative Power Europe: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EU.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⁴

관계발전의 최대 추동력, 경제무역 협력

EU와 중국이 상호 정치적·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관계발전의 가장 큰 추동력은 경제무역 협력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저가 소비재 상품의 유럽 수출량이 폭증했으며, 독일 등의 유럽 고기술 자본재도 중국으로 대량 수출되었다. 중국과 EU는 1985년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1984년 이후부터 매년 경제무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다. 지난 40년간의 교류를 통해 양자의 경제무역 관계는 괄목할 만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였다.

2014년 EU와 중국의 교역량은 1975년 수교 당시보다 250배 증가한 4,657억 유로로, EU 대외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7%였다. EU 대외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8%나 된다. EU는 2004년 이후 11년 연속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EU의 제2대 수출국이며, 최대 수입국 으로서의 경제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무역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을 배경으로 유럽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제조업 부문에서 실업이 발생하자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EU와 중국 간에는 2012년부터 철강, 태양광 패널, 이동통신 장비 등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 중국-EU 양자 무역사상 취급 금액이 가장 큰 태양광 제품 분야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 가격을 재조정하기로 하고, 무역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는 EU와의 경제협력 모멘텀을 조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가 그만큼

⁴ Xi's European tour and China-EU relations (2015.1.8), *EurActiv*.

★ EU의 대중국 수출·수입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3년	41,447	18.2	106,579	17.9
2004년	48,382	16.6	129,203	21.2
2005년	51,749	7.0	161,008	24.6
2006년	63,696	23.1	195,816	21.6
2007년	71,823	12.8	233,863	19.4
2008년	78,301	9.0	249,102	6.5
2009년	82,421	5.3	215,274	-13.6
2010년	113,454	37.7	283,598	31.7
2011년	136,415	20.2	294,835	4.0
2012년	144,206	5.7	292,038	-0.9
2013년	148,154	2.7	280,092	-4.1
2014년	164,733	11.2	302,447	8.0

자료: Eurostat

★ EU 대외무역 중 중국의 비중

(단위: %)

	수출	수입
2003년	4.8	11.4
2004년	5.1	12.6
2005년	4.9	13.6
2006년	5.5	14.3
2007년	5.8	16.2
2008년	6.0	15.7
2009년	7.5	17.4
2010년	8.4	18.5
2011년	8.8	17.1
2012년	8.6	16.3
2013년	8.5	16.6
2014년	9.7	18.0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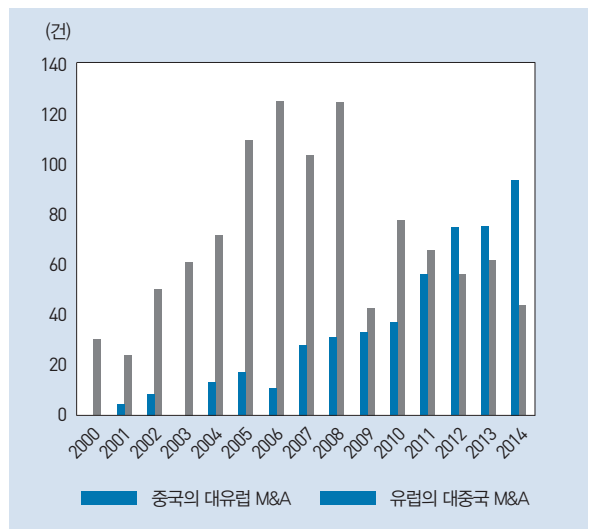


강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2013년 11월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EU-중국 간 전략적 협력 어젠다 2020'이 도출되는 배경이 되었다.⁵

최근 EU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적극성은 상호 투자 추이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2014년 말 EU의 대중국 직접투자 누계액은 966억 달러로, 중국의 대EU 투자액 499억 달러를 2배가량 상회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추이는 과거 패턴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대EU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 이전에는 주로 EU 기업이 대중국 인수합병(M&A)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그러한 패턴이 역전되고 있다.

2015년에 들어 4월까지 지분투자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 규모는 총 291건의 497억 달러(미체결 건 포함)에 달한다. 이 중 유럽을 대상으로 한 M&A 규모가 2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6.7% 증가했다.⁶ 물론 이처럼

★ 중국과 유럽의 상호 M&A 실행 건수 추이



자료: Thomson One

5 李罡 (2014), “中欧关系的现状、趋势及影响,” 『经济』.

6 중국 국유 화학업체 쉼치아나(CNCC)는 이탈리아 타이어 업체 피렐리의 지분 26%를 인수(3월)했으며, 푸싱(Fuxing) 그룹은 프랑스 리조트 회사 클렘메드를 인수(2월). (“中, 유럽·아시아 알짜기업 쏠어 담는다,” (2015.5.20.), 『세계일보』.)

최근 중국의 대EU 투자가 급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EU의 해외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래기술 제휴와 산업협력의 대상을 다원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크게 작용한 듯하다.

이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Huawei)의 대유럽 진출 동향에 잘 반영되어 있다. 최근 미국 의회는 화웨이의 기밀정보 절취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통신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화웨이는 유럽을 새로운 공략대상으로 삼았다. EU는 과거 2G(GSM)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5G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 통신 인프라 현대화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화웨이는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다. 이의 일환으로 유럽 인력을 2014년 7,700명에서 2019년 1만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영국 내 R&D 인력도 140명에서 2017년 300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이다. 또한 자사 ICT 인프라를 제공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영입에 착수했다.⁷

미래 지향적 협력 어젠다

EU와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부문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어젠다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개혁 어젠다는 EU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 말 중국은 공산당 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전면 개혁’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속(中速) 성장을 용인하고, 경제의 질적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한다는 중국판 뉴노멀 ‘신창타이(新常态)’ 시대를 선언했다. 중국은 그동안 국유기업이 독점했던 인프라 프로젝트에 민간 및 외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년 5월 중

7 Huawei Europe (2015.5.7). Huawei Launches New European Research Institute to Gear up European Digitization Progress and Achieve Win-Win Outcomes.

국 정부는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1,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80개 프로젝트에 대해 외자의 참여를 장려한다고 발표했다.⁸ EU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개혁 어젠다가 향후 공정하게 실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45% 이상의 기업들이 상당한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⁹

또한 중국의 ‘지속가능 성장’ 모델 모색에 있어 EU는 실질적인 협력 아이템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안정적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화’ 프로젝트에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에 잘 반영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지속 가능성’을 핵심 테마로 하는 ‘도시화 계획 2014-2020’을 발표한 직후 2014년 시진핑 주석의 유럽 방문을 추진한 것도 EU를 실질적 협력 파트너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¹⁰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미래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¹¹ 계획의 최종 종착지는 유럽이다. ‘일대일로’ 계획은 관련 인구가 40억 명(TPP 8억 명)으로 세계 1위, 경제규모가 15.2조 달러(TPP 27.7조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둔 마스터 플랜이다. EU로서는 정치·외교적 함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경제적 기회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EU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하는 국제개발은행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적극적 호응에 잘 투영되고 있다. 2015년 4월 모집 완료된 창립회원국 57개국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35%(20개국)에 달한다. 미국의 묵시적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유럽 4대 경제체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향후 전망과 한계

수교 40주년을 맞은 EU와 중국의 관계는 무역과 투자, 미래 협력 어젠다 등의 상호 보완성을 심화시키면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 “80个重大项目向民资开放,” (2014.5.26), 『凤凰财经网』.

9 Business Europe (2015.3). EU-China Relations: 2015 and Beyond.

10 Xi's European tour and China-EU relations (2015.1.8). EurActiv.

11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합성어

따라서 불과 1년 만에 ‘EU-중국 간 전략적 협력 어젠다 2020’에서 발표한 프로그램 중 70% 이상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양자관계 발전의 최대 과제는 투자협정(BIT)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중국과 EU의 협력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¹²

더구나 EU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거의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게 표출되기는 했으나, 이것도 중국과 EU 관계의 진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못했다.¹³ 이는 미국이 대만문제, 북한문제, 미일동맹 강화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은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양자관계 발전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유럽은 존재적 당위성으로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규범 질서를 강조한다. 또한 유럽이 AIIB에 가입했다고 해서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오히려 AIIB에 가입해 중국의 ‘독주(domination)’를 억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¹⁴

중국 기업들이 기술 업그레이드로 유럽 기업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유럽의 대중국 무역역조 현상이 정치문제로 비화될 경우 중국의 행보에 대한 유럽의 민감성은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미·중 간 패권경쟁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전개될 경우 EU는 역사와 문화, 규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EU-중국 간 전략적 협력 어젠다 2020’의 순조로운 진행이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사전에 방지할 것인지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2 “中欧关系已形成全面性、战略性和稳定性三大特征”, (2015.4.29), 『中国青年报』.

13 张林初 (2014.12.24), “2014年欧洲形势和中欧关系的几个特点: 国际形势年终稿,” 『国际网』.

14 What does Europe's AIIB entry mean for China and U.S.? (2015.4.1). China & US Focus Digest.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과제, 디지털 단일시장

Digital Agenda's Core Task: Digital Single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nations recognise the enhancement of digital industry's competitiveness as an imminent requirement. In this context, the EU has propelled the Digital Agenda for Europe from May 2010 to the front of seven major tasks set out in the Europe 2020 Growth Strategy. The completion of a Digital Single Market (DSM) as currently discussed is a task to tie 28 different European digital markets together similar to the Single European Market launched in 1993. The DSM is the most important of seven pillars of the EU's plan to ensure digital industry's competitiveness.

IT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거래(트래픽)가 2~3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모바일 거래는 매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모바일 데이터 거래는 2012~2018년까지 12배 증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도 같은 기간 중 1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보급 확대로 초(超)연결사회(connected society)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2013년 현재 전 세계에 70억~100억 개의 기기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그 수가 무려 260억~300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은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높지만, 2000년대 들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3억 1,500만 명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고, 디지털 경제가 고용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T 분야의 생산과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모든 산업 분야에 IT 기술이 응용됨으로써 유럽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IT 산업은 유럽 경제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400만 명 이상이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IT 분야의 고용 인력이 매년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산업 경쟁력에서 열세

EU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EU는 2000년대 초부터 리스본전략(2000~2010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 설정의 실패와 회원국들의 추진력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몇몇 기관이 분석한 유럽 국가의 디지털산업 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스웨덴, 영국, 핀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혁신지수(DEI)² 측면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DEI 순위(2013년)를 국가별로 보면, 스웨덴(2위), 영국(4위), 핀란드(7위)는 미국(6위)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10위), 독일(13위), 프랑스(19위)는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25위), 이탈리아(38위), 폴란드(39위), 그리스(41위)는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하지만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DEI 순위가 비교적 높은 유럽 국가들조차 재정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¹ Bauer, H., Patel, M. & Veira, J. (2014.12). The Internet of Things: Sizing up the opportunity. McKinsey&Company.

² 'Digital Evolution Index'는 MasterCard와 Tufts 대학의 Fletcher School에서 개발한 지수로, 50개국의 소비자 수요, 기업 공급 능력, 정부정책, 혁신 환경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2008~2013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음

화웨이(Huawei)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연결지수(Global Connectivity Index)³에 따르면, 미국(85점), 스웨덴(82점), 영국(78점), 네덜란드(74점), 한국(72점), 일본(71점), 독일(71점), 프랑스(66점)는 선두그룹(Leaders)에 속하는 반면, 스페인(55점), 이탈리아(51점), 포르투갈(49점), 체코(48점), 폴란드(44점), 루마니아(42점)는 후발그룹(Followers)으로 분류되어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IT 분야의 대기업 수에서도 유럽의 열세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Forbes Global 2000(2013년)을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2개 기업(SAP, 아마데우스)을 제외하면, 유럽은 IT 분야 전체는

★ 화웨이의 2015년 글로벌연결지수(GCI) 현황

순위	국가	점수(만점=100)
1	미국	85
2	스웨덴	82
5	영국	78
6	네덜란드	74
7	덴마크	72
8	한국	72
9	일본	71
11	독일	71
14	프랑스	66
17	스페인	55
18	이탈리아	51
19	포르투갈	49
23	중국	47
25	러시아	46
27	폴란드	44
30	루마니아	42

자료: Huawei (2015), Global Connectivity Index 2015.

³ 화웨이는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IoT, 빅 데이터, 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5개 분야의 수요, 공급, 경험, 잠재력을 평가(만점=100점)하여 국가별로 순위와 평점을 부여하였음

물론 인터넷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글로벌 IT 기업 수 부문에서는 미국이 33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4개), 중국(4개), 한국(2개), 대만(1개)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강소기업이 많은 유럽의 독특한 산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R&D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적은 현실은 유럽이 디지털 산업의 기술개발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美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격차는 유럽 시장의 경쟁구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EU집행위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온라인 서비스 시장은 미국계 기업이 54%의 점유율로 막강한 입지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28개 회원국의 자국기업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EU 기업(cross-border online services)은 고작 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대표 IT 기업인 구글은 유럽의 서치엔진에 이어 브라우저, 스마트폰 OS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구글은 유럽 서치엔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점유율(74.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구글 크롬의 유럽 브라우저 시장점유율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에 1위로 올라섰다. 뿐만 아니라 노키아 심비아의 몰락과 함께 구글 안드로이드가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서 유럽 제1의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단기간 내에 성장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주요국 정부는 I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과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영국 정부는 '테크시티 이니셔티브', 2013년 프랑스 정부는 '라 프렌치 테크' 계획을 도입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금융시장 회복과 함께 성공적인 유럽 테크기업들의 M&A또는 IPO를 통한 엑시트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편승하여 글로벌 기업들은 유럽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생 테크기업들에 대한 인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요국에서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자국의 신생 테크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IT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신종산업이 전통 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개인 간의 상호 신뢰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경제주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바일 앱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Uber)가 등장하면서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미등록 택시기사가 늘어나자 유럽 주요국에서 택시기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최대 관광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숙박 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사업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의의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저렴한 배송비용을 앞세운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이 타격을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프랑스 신간 도서 시장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2003년 3.2%에서 2013년 18%로 늘어나며 전통 중소규모 서점이 경영난에 직면했다.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을 추진

EU집행위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U는 중장기 성장전략(Europe 2020 Growth Strategy)의 7대 과제⁴ 중 첫 번째 과제로 2010년 5월부터 ‘디지털 성장전략(Digital Agenda for Europe)’을 추진해왔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단일시장(DSM: Digital Single Market) 완성은 1993년에 출범한 유럽 단일시장(Single European Market)처럼 28개국으로 쪼개져 있는 유럽의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이다. 디지털 단일시장은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EU의 7개 정책(Seven Pillars)⁵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⁴ 혁신동맹(Innovation Union), 교육개혁 및 청년인력 활용 촉진, 디지털 성장전략, 자원 효율성 제고, 산업경쟁력 제고, 신기술 및 직업훈련 강화, 빈곤 퇴치
⁵ 디지털 단일시장 구현, 표준 및 상호 호환성 제고, 온라인 신뢰 및 보안 강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R&D 투자, 디지털 교육 및 기술 보급 촉진, ICT 응용 분야 확대

지난 2015년 5월 6일에 EU집행위는 EU의 IT 사용 환경 및 규범을 통일하여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EU집행위는 디지털 단일시장의 완성을 위해 3개 분야에서 총 16개 과제(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분야는 디지털 시장의 접근성 제고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EU는 전자상거래 계약의 표준화, 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배송체계(parcel delivery) 효율화, 부가세 간소화⁶(원스톱숍 제도 시행)⁷, 온라인 거래의 불필요한 지리적 제한(geo-blocking) 금지, 저작권 제도 개선, 위성 및 케이블 지침 개정,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독점법 조사 등 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EU는 현행 통신법 개정,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멀티미디어법⁸ 개정, 개인데이터 보호 강화(e-privacy 지침 개정), 사이버보안 민간 협력체제 구축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는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ICT 기술 표준화, 전자정부 재추진(e-Government Action Plan) 등 3개 과제를 설정해놓았다.

우리가 EU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 강화 정책이다. EU집행위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美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검색엔진, SNS, 앱스토어, 가격비교 사이트 등 미국

⁶ EU는 2015년 1월부터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EU 역내(intra-EU) 온라인 공급 서비스(B2C)에 적용되는 부가세 징수방식을 ‘공급지 과세’에서 ‘소비지 과세’로 전환

⁷ 기업들이 다수의 소비자 소재국에 VAT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VAT 등록 특정 회원국의 웹 포털을 통해 VAT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Mini-One-Stop-Shop(MOSS) 제도를 도입

⁸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인터넷 업체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분석해 시장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위해 개인 데이터의 무분별한 역외 이전 및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유럽 클라우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과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완성에 필요한 16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오는 2016년까지 마련하고,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럽의 디지털 시장이 계획대로 통합될 경우 EU 역내장벽이 제거됨으로써 EU 역내 온라인거래의 활성화와 빅 데이터 시장 확대 등 디지털 경제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EU집행위는 온라인 거래의 지역차단 금지, 전자상거래 계약 표준화, 부가세 간소화로 인해 역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신법 개정, IT 기술 표준화 등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유럽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EU집행위는 EU 28개국의 디지털 시장이 통합되면 4,150억 유로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타국과 거래하는 중소 온라인 업체는 부가세 규정을 준수하느라 매년 5,000유로를 지불하고 있는데, 부가세 간소화 조치는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만약 EU 역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117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유럽인 가운데 59%만이 4G를 사용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31%만이 30Mbps⁹ 이상의 초고속 브로드밴드에 연결되어 있는데, 빅 데이터 이용에 따른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는 유럽의 100대 제조업체가 빅 데이터를 사용하면 4,250억 유로의 비용이 절감되고, 빅 데이터 산업이 2020년까지 EU의 경제성장률을 1.9%(2,060억 유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⁹ 인터넷 속도 단위로 megabits per second.

코펜하겐연구소는 2010년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거시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브로드밴드 보급 및 디지털 기술 확산 측면에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향후 10년간 EU의 GDP가 8% 증가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경우 2020년에 EU GDP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도에 따라 10년간 4%p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디지털 단일시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 통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2010년에 코펜하겐연구소는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13개 분야의 100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¹⁰

★ 디지털 단일시장의 장애요인

	구분	과제 수	중요도
1	일반	7	2.6
2	지침의 범위	5	1.8
3	적용법	4	2.5
4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보호	21	2.1
5	콘텐츠 및 저작권	16	2.4
6	온라인 중개 책임	5	2.6
7	전자 결제	5	2.6
8	전자 계약	6	2.0
9	망 중립성	9	2.6
10	스팸	10	2.3
11	사이버범죄	4	2.5
12	분쟁해결	5	2.0
13	자율규제	3	2.0
	전체	100	2.3

주: 중요도는 1(낮음)~3(높음)으로 측정
자료: Copenhagen Economics (2010,3), The Economic Impact of a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¹⁰ Copenhagen Economics (2010, 3), The Economic Impact of a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EU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의의

Recent Trends and Significance on ISDS between EU Investors and State

The dispute between investor and state, for example tha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Lone Star over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gains attention once again as the first hearing was held at the ICSID in Washington between May 15 and May 22, 2015.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refers to a system to settle an investment dispute between an investor and an investment-receiving state that causes losses or damages to the investor, due to investment-receiving state's violation of investment protection obligations under the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or FTA Investment Chapter. In this report, recent trends and significance on the EU's ISDS system are explained.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발생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이 지난 5월 15~22일 워싱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제1차 심리가 개최됨에 따라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¹ 한국에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으로 불리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는 양자간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 또는 FTA 투자 챕터에서 투자유치국이 투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발생한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² 즉, ISDS는 투자자가 투자유치국과의 분쟁을 투자유치국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이때의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당사 중재를 기본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 ISDS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규범인데, 그동안 ISDS를 소홀히 했던 EU는 최근 미국과의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를 앞두고 새로운 ISDS 모델 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U는 최근 캐나다, 싱가포르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는데, EU 차원에서 논의한 ISDS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U의 ISDS 정책 동향은 한국의 투자협정 체결 시 ISDS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EU-캐나다 FTA(이하 CETA)의 ISDS 제도를 중심으로 EU의 ISDS 정책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EU의 투자정책 개관

2009년 12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 조약(이하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 차원의 공동통상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리스본 조약 발효 이전에는 EU 회원국들이 무역통상정책을 각각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자국의 투자정책을 반영하여 제3국과 BIT를 체결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EU 회원국들과 개별적인 BIT를 체결하였다.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기능조약⁴ 제3조에 따라 EU가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을 행사하는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과 관련된 내용은

¹ "한국정부-론스타 '5조원대 소송' 쟁점과 전망." (2014. 5. 14). 「연합뉴스」.
² 엄격한 의미에서는 ISDS 제도는 분쟁해결절차인 절차적 규정만 의미하나 ISDS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의무의 위반이 선행되어야 하고, 실체적 의무의 범위나 해석의 문제가 ISDS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에 ISDS 제도를 논할 때 실체적 규정을 함께 논하기도 함. 이에 본고에서도 실체적 규정을 일부 포함

³ 한국은 1967년 독일을 시작으로 총 22개 EU 회원국과 BIT를 체결하고 있음. (박덕영 (2014). "주요국의 모델 BIT와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법제연구원.)
⁴ 영문 명칭은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으로서 EU의 역할, 정책, 활동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통합을 위한 4개 조약 중 1993년 발효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과 함께 EU의 주요 근거 조약임

실제로 디지털 단일시장의 추진 속도는 국가와 분야마다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현재 EU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가구에 30Mbps의 브로드밴드를 보급하고, 50% 이상의 가구에 100Mbps의 브로드밴드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 현재 유럽 국가들의 30Mbps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23%, 스페인 27%, 그리스 28%, 독일 36%, 영국 37%, 프랑스 39%, 네덜란드 41%(EU 전체 31%) 등으로 목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로도 격차가 크다. 이는 EU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 간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한국 IT 기업들의 유럽 사업은 대체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콘텐츠와 데이터, 플랫폼)로 이동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기기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기업들은 EU가 본격 추진하려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포착하는 한편, 기업규제 강화라는 위협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1987년에 착수하여 1993년에 출범한 유럽 단일시장처럼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도 완성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국가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가별로 선택과 집중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디지털 단일시장의 추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내 사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기존 사업전략의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단일시장 추진에 따른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내 온라인 거래 증가, 초고속 브로드밴드(4G, 5G) 보급 확대, IoT 등 디지털 단일시장 관련 법률 및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럽은 미국 IT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원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이러한

견제심리를 십분 활용할 경우 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은 물론 IoT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의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분야에서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와 함께 브뤼셀 현지에서 로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U 기능조약 제206조와 제207조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206조에서는 공동통상정책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밝히고, 제207조에서는 공동통상정책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나열하고 있다. 그중에 외국인직접투자정책 등을 포함한 공동통상정책은 통일된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FTA와 BIT 등 국제투자협정(IIA)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EU에 부여하고 있다.⁵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 분야를 포함한 공동통상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EU는 투자 챕터가 포함된 다수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⁶ 그중 2014년 타결되었고, 투자 챕터에 ISDS를 포함하고 있는 EU-캐나다 FTA(CETA)와 EU-싱가포르 FTA(이하 EUSFTA)가 대표적이다. 특히, CETA는 EU가 공동통상정책을 행한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FTA로, EU 공동통상정책의 구체적 적용 사례이자 향후 EU의 FTA 협상에서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SFTA는 CETA와 비슷한 시기에 협상이 진행된 관계로 ISDS 내용은 CETA의 ISDS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CETA의 ISDS 내용을 중심으로 EU의 ISDS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SDS 제도의 주요 내용⁷

1) 실체적 규정

첫째,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권리를 명백히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안전, 환경, 공중도덕 및 문화 다양성의 촉진과 보호 같은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규제하기 위한 당사국의 권리를 유보할 것을 CETA 전문(preamble)에 규정하였다.

둘째,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이하 FET),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등 핵심적인 실체적 보호 규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먼저 FET와 관련하여 위반사항 및 핵심 개념을 구체화하였다(CETA 제10.9조). FET는 위반사항을 ①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절차상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거부, ② 근본적인 투명성 위반을 포함하여 사법적, 행정적 절차 위반, ③ 명백히 자의적인 조치, ④ 성, 인종 또는 종교적 신념과 같은 이유에 의한 차별, ⑤ 강압, 감금 및 괴롭힘과 같은 투자자에 대한 불법적 대우, ⑥ 당사국이 채택한 것으로 FET 위반에 관한 모든 추가적인 요소의 위반 등 6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투자자에 의한 남용과 중재판정부에 의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위반사항과 관련해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혹은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FET의 부여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여 FET 부여에 대한 당사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s)”의 의미를 투자유치국이 구체적인 약속 또는 표시(specific promise or representation)를 한 경우로 한정해 개념을 분명히 하고, 투자유치국의 위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간접수용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공공정책 조치에 대한 투자자의 제소를 피하기 위해 간접수용의 구성요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다. CETA 부속서 10.11에서는 ① 건강, 안전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채택한 정당한 공공정책은 그러한 조치가 목적에 비추어 명백히 과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간접수용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사용권, 향유권 및 처분권과 같은 재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③ 간접수용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세한 사안별 분석방식을 도입하고, 어떠한 조치가 투자자의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⁵ 이주윤 (2014), “EU의 FTA 정책법제 동향 및 시사점”(Issue-Brief). 한국법제연구원

⁶ 대표적으로 TTIP, EU-중국 BIT, EU-인도 FTA 등이 있음

⁷ 동 내용은 EU의 공동통상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주체인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서 발표한 CETA 투자조항에 관한 설명(European Commission (2014), Investment Provisions In the EU-Canada Free Trade Agreement(CETA).)

2) 절차적 규정

첫째, 비차별, 공공목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없는 수용 및 공정공평대우 위반과 이로 인해 특정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중재청구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CETA 제10.17조).

둘째, 중재절차에 대한 충분하고 의무적인 투명성 조치를 도입하였다. 즉,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정보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예, NGOs)의 중재심리 참여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제한할 수 없다(CETA 제10.33조).

셋째, 도덕성과 전문성이 높은 중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인행동규정(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중재인행동규정은 이익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선임된 중재인에게 현실적 또는 인식상의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예컨대 로펌에 대한 과거 업무 또는 연계 등)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중재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중재인을 교체하고, 이를 위한 결정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판정부 내부의 동료 중재인이 아니라 외부자인 ICSID 사무총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CETA 제10.25조).

넷째, 당사국들이 사전에 동의한 중재인 명부를 두고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인 명부에서 중재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CETA 제10.25조). 이를 통해 당사국들은 3명의 중재인 중 최소 2명은 항상 당사국들이 동의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2명의 중재인은 당사국이 사전에 합의한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수준을 항상 점검할 수 있다.

다섯째, 중재판정부는 통상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나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단독 중재인(sole arbitrator)만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자가 제소할 경우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먼저 분쟁당사국에 제안해야 한다. 그리고 분쟁당사국은

투자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청구금액 또는 손해액이 적은 경우 이를 공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CETA 제10.22조, 제10.25조). 동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 분쟁투자자를 배려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분쟁당사국도 중재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수주일 내에 투자자의 법적 이익이 없는 청구(claim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에 대해 기각을 허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CETA 제10.29조).

일곱째, 패소자비용부담원칙(loser pays principle)을 처음 명기하였다. 이로써 투자자의 사소한 또는 근거 없는 제소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패소한 투자자가 청구의 상대방인 투자유치국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여 기존에 승소한 투자유치국이 자신의 소송비용을 그대로 부담해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였다(CETA 제10.36조).

여덟째,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외 ‘조정(mediation)’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느 때나 이용 가능하며, 조정인(mediator)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한다(CETA 제10.19조).

아홉째, ISDS 절차에 대한 협정 당사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양 당사국이 협정문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해석을 채택할 권리와 당사국이 분쟁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CETA 제10.27조, 제10.35조). 동 제도는 협정문 해석에 대한 당사국 통제를 인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열째, 상소메커니즘 도입을 규정하였다(CETA 제10.42조). ISDS 절차에 상소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EU집행위가 지난 2010년에 언급한 바 있다.⁸ 따라서

⁸ 관련 정책문서는 EU집행위가 2010년 11월 9일에 발표한 EU의 2020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의 무역정책이 대표적임. (European Commission (2010), Growth and World Affairs-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CETA에 상소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EU의 통상정책이 실제 FTA 협정문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은 한미 FTA 등에서 상소메커니즘 도입 가능성을 단순히 언급한 것에서 나아가 상소메커니즘의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즉 상소메커니즘의 본질과 구성, 적용 가능한 범위와 검토 기준, 상소 절차의 투명성, 상소 판정의 효과 등을 향후 관련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상소메커니즘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이와 같은 CETA의 ISDS 제도를 평가하면, 일부는 한미 FTA의 ISDS 내용과 유사하나 상당수 내용은 기존 ISDS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NAFTA에서 처음 ISDS를 도입한 이후 이에 근거한 투자분쟁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투자분쟁은 대부분 국가의 공공정책 수행과 관련된 공법적 분쟁이다. 그러나 ISDS는 개인 간 상사분쟁 해결 수단인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핵심으로 삼고 있어, 공법적 분쟁을 사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중재)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소위 ISDS의 '정당성(legitimacy)'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ISDS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부족, 중재절차의 투명성 부족과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중재판정 간 불일치, 상소기구의 부재 등이 있다.

CETA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 FTA 등 미국식 ISDS와 다른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실체적 규정의 경우 투자 챕터 전문에서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권한을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FET의 위반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점 등이다. 절차적 규정은 중재인행동규정, 당사국에 의한 중재인명부 사전 작성, 단독중재인 제도의 도입, 패트스 트랙제도의 도입, 패소자 비용부담원칙의 도입, 조정 등 대체분쟁 해결수단의 강화, 상소메커니즘 도입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계획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특히, 당사국에 의한 사전 중재인명부 작성 및 활용은 현행 ISDS 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인 중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완화하여 중재판정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는 CETA와 EUSFTA에서의 ISDS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FTA인 TTIP에서는 보다 진일보한 ISDS를 만들기 위해 아래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⁹

첫째, 정부규제권한의 확보 문제와 관련해 앞서 설명한 협정 전문에서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수행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FET나 간접수용 등 실체적 규정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규제권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협정문에 명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중재판정부의 설립과 기능 문제다. 사전중재인 명부와 관련해 CETA는 분쟁당사자들이 의장중재인 임명에 실패할 경우 사전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모든 중재인을 당사국이 합의한 사전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중재인과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인 임명을 둘러싼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사실상 ISDS가 중재가 아닌 법원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소메커니즘을 통한 ISDS 판정의 재심 문제다. 상소메커니즘의 설립과 관련해 ISDS를 위한 양자 간 상소기구의 도입과 검토범위에 법적 문제와 명백한 사실평가의 오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소기구는 WTO 상소기구를 모델로 삼아 WTO 상소기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자격을 기준으로 7명으로 구성할 것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⁹ European Commission (2015). Investment in TTIP and beyond – the path for reform.

넷째, 국내 사법제도와 ISDS의 관계 문제다. 투자자가 법적 절차의 시작에서 ISDS와 국내법원 중 한 가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안(fork-in-the-road)과 투자자가 한 번 ISDS에 청구를 제기하면 투자자가 국내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안(no u-turn)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4대 추가 개선사항 가운데 핵심은 상소메커니즘 도입과 당사국이 선정한 중재인명부의 설치 및 활용이며, 이는 결국 하나의 상설법원 설립을 의미한다. 또한 국제상사중재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식 ISDS와는 다른 ISDS의 도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사점

지금까지 EU의 ISDS 정책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EU는 그동안 국제상사중재메커니즘을 핵심으로 하는 ISDS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NAFTA 등 미국식 투자협정에서 발전되어온, 투자자 이익 보호에 치중하는 ISDS에서 벗어나 투자유치국의 공공정책 수행 권한을 강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TTIP 등 향후 EU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ISDS는 사실상 국내 법원 시스템과 유사한 상설법원 형태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EU뿐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UNCTAD 등 국제기구에서도 ISDS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¹⁰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한-EU FTA 투자 챕터(투자협정)의 체결과 한중 FTA 투자 챕터에 대한

¹⁰ ICSID에서 상소메커니즘의 도입과 관련해 논의한 있으며, UNCTAD에서는 최근 ISDS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ICSID (2004, 10, 22). Possible Improvements of the Framework for ICSID Arbitration(ICSID Secretariat, Discussion Paper).; UNCTAD (2013, 6, 26). Reform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n Search of a RoadmapUnctad.)

추가 협상, 그리고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와 BIT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EU의 ISDS 정책을 지속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법학박사



깊어가는 유럽의 고민: 불법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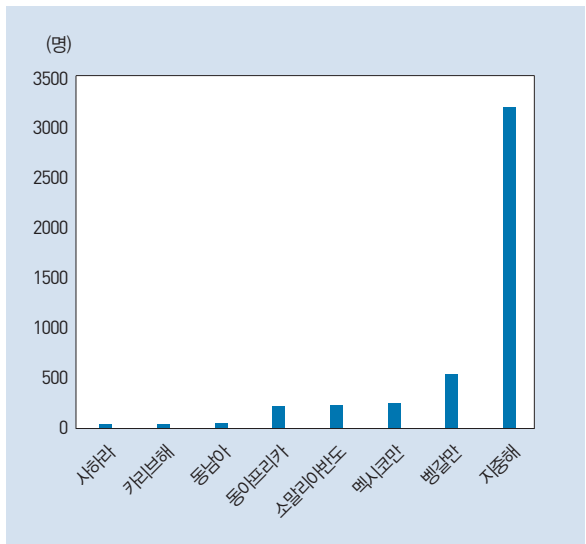
Illegal Immigration to Europe

The refugee policy of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come deeply bogged down as refugee numbers to Europe rapidly increased. Not only has the scale of immigration increased, but also the EU's security risk has grown as refugees can quickly move across the EU. As of 2014, the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whose return to their own countries was decided, stood at 252,003. However, the number of those who had actually returned to their own countries was only 161,309. Because resources for emergency handling are insufficient at borders, while basic information management, including the illegal immigrants' nationality, is also stretched due to their rapid increase, the size of actual illegal immigrant numbers is likely to be larger than the number reported. How can the European Commission solve those problems?

불법 이민자의 블랙홀인 지중해

2015년 4월 몰타로 향하던 2,000여 명의 리비아 난민을 실은 5척의 배가 침몰하여 무려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참상이 다시 한 번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 지중해에서는 2014년 한 해에만 3,400명의 난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사망한 난민 수는 무려 2만 5,000여 명에 이른다.¹ 부유한 유럽 선진국으로 향하는 꿈의 노선인 지중해는 이제 세계 인권의 사각지대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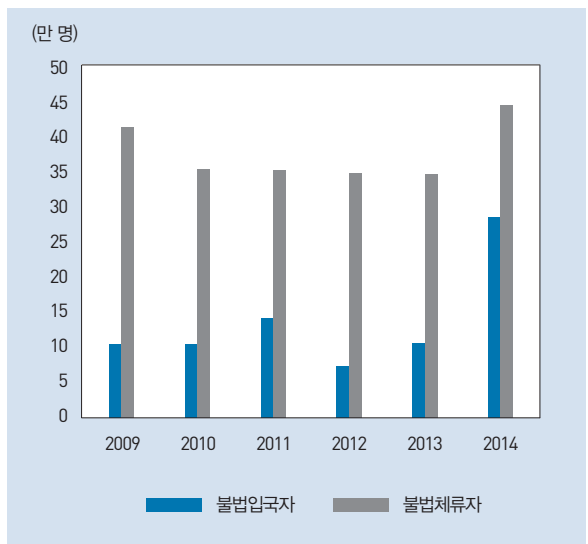
★ 지역별 난민 사망 규모 (2014년)



자료: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2015).

1993년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인 세우타와 메야에 접경한 모로코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쇄도하면서 시작된 유럽을 향한 지중해 난민의 역사는 해가 갈수록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1993년에 설치되어 1995년, 1998년, 2005년 등 몇 번에 걸쳐 그 무시무시한 면모를 눈에 띄게 확대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대형 펜스는 기하

★ 유럽의 불법이민자 규모



자료: Frontex(EU 국경관리기관)

¹ EU Commission (2015.3.4). Towards a Comprehensive European Migration Policy: 20 years of EU Action, Fact Sheet.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중해 난민의 비참한 상황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EU국경관리국(Frontex)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만 1,051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유럽의 불법이민자 수는 2012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후 2013년 10만 7,36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2014년에는 28만 3,532명으로 2011년의 최고 기록을 2배 이상 경신하였다. 2014년 유럽 진출을 시도한 난민 중 지중해 해상을 통한 불법이민자 수가 22만 19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77.7%)을 차지한다. 그중에서 60%인 17만 664명이 지중해 중부를 통해 이탈리아와 몰타에 도착하려는 난민들이었는데, 이는 2013년의 4만 5,298명보다 2.8배 늘어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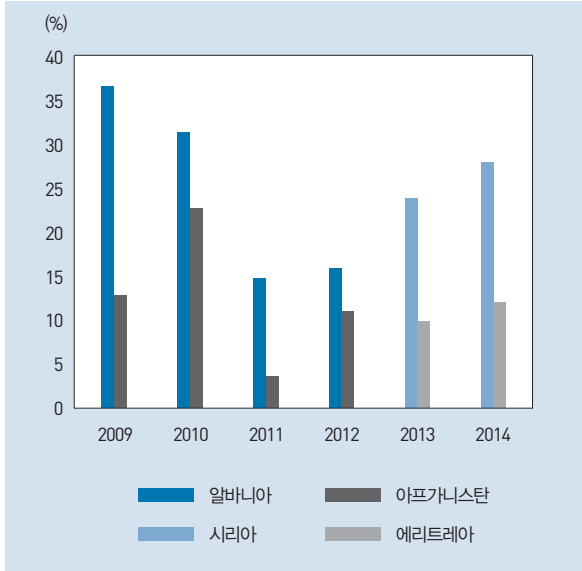
난민의 다수는 시리아와 에리트레아인

최근 지중해를 통한 난민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예년과 달라지고 있다. 2009~2011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과 알바니아 난민이 대부분이었지만, 2012년 이후 시리아 내전이 악화되면서 시리아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2012년 아프가니스탄인(15.8%) 다음으로 많은 비중(10.9%)을 차지했던 시리아인은 2013년에는 23.7%, 2014년에는 27.9%를 차지하며 유럽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부상하였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인의 비중은 2013년, 2014년 각각 7.9%, 7.5%로 줄고 있다.² 2015년 IS의 등장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시리아 등 주변 난민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리트레아인의 비중이다. 알바니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대부분의 난민 배출국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내전국가인데 비해 에리트레아는 내전 등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거의 없는 인구 630만 명의 소국이다. 그런데 이 작은 국가 출신이 지중해 전체 난민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² 절대 규모는 증가세 유지: 2013년 8,514명, 2014년 2만 1,287명

★ 유럽의 불법이민자 연간 배출 1, 2위국



자료: Frontex (2015).

2014년까지 난민 숫자가 30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가 난민으로 빠져나오고 있어 그야말로 현대판 엑소더스가 연출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릴 만큼 가혹한 독재체제다. 1993년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후 독립영웅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69세)의 폐쇄적인 철권통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에리트레아인들이 국가를 버리고 탈출하는 제일 큰 원인은 비인간적인 군복무 때문이다. 에리트레아에서는 16세가 되면 남녀 모두 징집대상이 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복무해야 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이 열악한 금광 및 건설 현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 정부를 향해 약간이라도 저항의지를 보이면 정치범으로 몰아 50도가 넘는 철제 컨테이너에 가두거나 온 몸에 끈을 바른 상태로 벌에게 노출시키는 등 잔인하기 그지없는 가혹행위를 가한다. 월경을 시도하다 잡힌 난민은 그 자리에서 총살된다. 자유와 인권을 위해 탈출한 에리트레아인들은 그동안 주로 인근 리비아에 머물렀으나 최근 리비아의 상황도 악화되면서 지중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015년 4월 20일 지중해 난민선 난파



당시 깨진 선박 파편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해변으로 나와 정신을 잃은 에리트레아 출신의 웨가시 네비아트(24세)를 그리스 군인 데리기오르키스 병장이 바다에 뛰어 들어 구한 사건은 에리트레아 난민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에리트레아의 역사



- 19C 후반~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지배
- 2차 대전 직후: 에티오피아에 강제 편입
- 1961~1993년: 독립 전쟁
- 1993년: 독립 선언
- 1993~현재: 아페웨르키 대통령 철권통치

시리아와 에리트레아는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이민자 수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망명신청자 수의 증가세도 주도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2013년 34만 5,098명에서 2014년 44만 1,780명으로 28% 증가했는데, 이 중 17%가 시리아, 7.8%가 에리트레아 출신이다. 2014년 망명 신청자 수도 전년 대비 41% 늘어난 61만 5,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1위가 시리아 12만 명, 2위가 에리트레아 4만 명이였다.

밀수업자들이 난민 증가를 가속화

나무보트를 이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2014년 8월부터 카고선(대형 화물선)을 이용하여 터키에서 지중해 중부 지역을 통과하여 이탈리아로 향하는 불법이민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터키 남동쪽 연안에서 나무보트를 타고와 심해에서 카고선으로 환승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밀수업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난민 수송 자체가 엄청난 수익 사업이다. 불과 15만~40만 유로에 구입한 중고 카고선 한 척이 매번 200~800명의 밀입국 희망자들을 수송하면서 1인당 4,500~6,000유로의 요금을 거둬들인다. 결과적으로 통상 카고선 한 척당 매출은 2,5백만~4백만 유로, 순이익은 1,5백만~3백만 유로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이민자들을 이용한 밀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이다.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국경에서 밀수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한 해 67억 달러에 달한다.³ 따라서 지중해의 난민 수송 시장은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에게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다름없다. 이 조직들 때문에 가뜩이나 내전, 폭정, 기아에 허덕이는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의 불법이민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인신매매, 밀수 등 난민을 악용하는 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EU는 2014년 6월에 채택된 ‘법 집행과 내무 영역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라인(The EU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Justice and Home Affairs Area)’에 따라 2015년 중반 ‘EU 역내 안보 전략(ISS)’을 재수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EU집행위는 EU 의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내로 ISS의 최우선 5대 과제를 설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국경 관리를 통한 안보 강화’가 선정되었다. 또한 2011년 EU집행위가 제안한 ‘여객 성명 등록제(Passenger Name Record)’의 시행을 2015년 연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EU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효율적인 EU의 난민정책

유럽으로의 난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EU집행부의 난민정책은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다. 불법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다수가 EU 역내 회원국들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EU의 안보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 2014년 본국 귀환조치가 결정된 불법이민자는 25만 2,003명이나 실제로 귀환한 인원은 16만 1,309명으로 64%에 불과하다. 게다가 불법이민자의 급증으로 국경에서 이들에 대한 국적 등 기초적인 정보 관리는커녕 응급처치에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실제 불법이민자의 규모는 발표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듯 난민 대책이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난민정책은 비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난민과 망명에 관한 유럽평의회(ECRE)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미 EU의 난민 보호시스템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크게 성토했고 있다.⁴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이 난민 관리를 위해 제정한 더블린조약(Dublin Regulation)과 유로닥(Eurodac)이다.

EU의 난민관리제도: 더블린조약과 유로닥

- 더블린조약: 1990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이 조약은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최초의 입국 국가에서만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유로닥(Eurodac):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자의 지문 등 신원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제도들은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의 외곽지역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다. 실제로 난민의 90%가 외곽의 10개국에만 수용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5개국에 72%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난

민을 지원하고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고의적으로 난민 신청자들의 지문을 채취하지 않거나 북유럽으로의 이주를 방조하기 시작했다. EU 회원국들은 이 조약이 사방이 막혀 있는 독일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해왔다. 독일은 유럽의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난민 수용 비율은 EU 회원국 중 11위에 불과하다. 급기야 디폴트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으로의 난민 방출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15년 3월 6일 그리스 외무장관은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밀려난다면 수백만 명의 이주민과 수천 명의 지하디스트가 유럽으로 방출될 것이라고 엄포했고, 이를 뒤 그리스 국방장관은 EU가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방지할 경우 독일에 난민을 풀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반발한 독일 경찰조합은 쉥겐조약⁵에서 그리스를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회원국 중 난민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오는 난민 3명 중 1명은 이탈리아에 망명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중 일부만이 일자리나 머물 곳을 얻을 뿐 대부분은 노숙자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다. 난민의 대량 유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탈리아는 최근 리비아와 협약을 맺고 리비아 난민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는 난민보호프로그램(SPRAR)을 통해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상담과 언어습득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은 7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헝가리, 벨기에, 폴란드 등도 예외가 아니다. 헝가리의 난민 피난처는 대부분 폐쇄되었고, 심지어 난

³ UNODC (2010.6.). The Globalization of Crime – A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reat Assessment.

⁴ NANCEN(난민인권센터) (2015.3.18.). “유럽에 난민 풀겠다는 그리스, 유럽 밖에서 통제하겠다는 EU.”

⁵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



민 피난처가 춤을 추는 클럽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벨기에에는 난민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분산 수용하거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난민을 홀로 방치해둔 사례도 발생했다. 폴란드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정한 난민 보호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은 이들 나라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블린조약으로 인해 독일 등 원하는 국가로 합법적인 이동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 밀입국 범죄조직의 도움을 얻어 불법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더블린조약으로 난민이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인권문제가 악화되자 ‘더블린조약은 사실상 밀입국 범죄조직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⁶

EU의 퇴행적인 정책이 참사의 일부 원인

비효율적인 EU의 난민정책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우경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퇴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영국의 독립당(UKIP), 프랑스의 국민전선(FN) 등 최근 유럽 곳곳에서 자국의 경제위기를 이민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정치 판도를 흔들면서 EU의 난민정책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14년 각국의 민족주의적이고 자국이기주의적인 여론에 밀린 EU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난민 구조 활동을 전격적으로 축소했다. 2013년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근처에서 360여 명의 난민이 익사한 사건을 전환점으로 그해 10월 이탈리아 정부는 EU의 재정지원하에 지중해 전 해역에서 순찰 및 구조활동을 펼치는 일명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작전을 개시했다. 덕분에 2014년 한 해에만 무려 16만 3,000명 이상의 난민이 구조되었다.⁷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탈리아와 EU 정부는 재정난으로 인해 월 9,500만 유로인 ‘마레 노스트룸’ 작전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고,

난민구조가 오히려 불법 이주를 유도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마레 노스트룸’ 작전을 중단하였다. 대신 EU의 국경관리기관(Frontex)이 이탈리아 해군으로부터 그 기능을 이전받아 기존 예산의 1/3 규모로 주로 이탈리아 해역에 한하여 구조보다는 순찰에 집중하는 ‘트리톤(Triton)’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와중에 영국은 한 발 더 나아가 2014년 지중해 난민구조 지원을 전면 중단해버렸다.

그러나 난민 유입을 촉진하기만 한다는 ‘마레 노스트룸’을 중단한 뒤로 지중해 난민은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마침내 2015년 4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사고 직후 국제 앰네스티는 <유럽의 침몰하는 수치: 해상 난민과 이주민 구조 실패⁸>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지중해 중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리톤’ 작전의 문제와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작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작전 범위가 이탈리아와 몰타의 해안으로부터 30해리 지점까지의 국경 순찰로만 제한되어 있어, 람페두사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해리 지점까지인 ‘마레 노스트룸’과는 달리, 실제 난민 보트가 위험에 처하는 지역과는 훨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구조작전에서는 해상 구조 목적으로 건조되지 않은 일반 상선들이 오히려 구조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4월 18일 800여 명이 한꺼번에 익사한 것도 구조에 나선 상선이 한쪽으로 몰린 난민들로 인해 뒤집힌 결과로 밝혀졌다. 결국 대형 참사의 원인은 EU가 전문 구조선박의 활동을 포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EU의 퇴행적인 난민정책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EU의 뒤늦은 난민정책 개선 시도

2015년 대참사 이후 쏟아지는 세계 여론의 비난 속에 EU는 늦게나마 난민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EU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관리 개선 이슈’가 EU집행위의 명시적인

우선과제로 선정되었다. 4월 20일 EU 지도자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온 EU 난민정책의 핵심 문제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10개의 액션 플랜’을 내놓았다. ‘트리톤’ 작전의 작전 수준, 범위, 예산을 기존의 ‘마레 노스트룸’ 작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일부 외곽국가들에만 제한된 난민 수용 및 처리의 부담을 EU 전 회원국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민에 대한 EU의 10개 액션 플랜

※ 2015년 4월 20일 지중해 난민참사 직후 개최된 EU 외무장관 및 내무부장관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10개 대응 방안

- ① ‘트리톤’ 작전 등 지중해 협력 활동 강화(재정 및 영역 확대)
- ② 밀수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포와 밀수선 파괴 등)
- ③ Europol, Frontex, EASO, Eurojus⁹ 등 관련 기관의 공동회의를 정례화
- ④ 이탈리아, 그리스에 EASO의 망명신청 공동작업팀 배치
- ⑤ 모든 이민자의 지문채취 수행을 회원국들에 의무화
- ⑥ 긴급 재배치 메커니즘 옵션에 대한 고려
- ⑦ EU 차원에서 보호대상에게 이주 장소를 제공하는 임시 방안
- ⑧ 불법이민자의 신속 귀환을 위한 新귀환프로그램 구축
- ⑨ 리비아 주변국(니제르 등)과의 협력 강화
- ⑩ 주요 제3국에 이민 연락 관료(ILO) 파견

자료: EU Commission (2015.), Joint Foreign and Home Affairs Council: Ten point action plan on migration.

이어 5월 13일에는 액션 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어젠다¹⁰를, 다시 2주일 뒤인 5월 27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했다. ‘트리톤’ 작전, 밀수업자 퇴치를 위한 단일기구 출범 외에도 난민의 재배치와 관리 책임 분담을 위한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GDP, 인구, 실업률, 기수용 망명 및 이주자들의 숫자 등 새로운 기준¹¹에 따라 당장 2015년 5월 말까지 2만 개의 난민 이주 장소를 범EU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5,000만 유로 상당의 2015/16년 추경예산 집행안도 추가했다. 나아가 난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난민 집중 배출 국가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15년 연내에 니제르에 이민자 사전 관리를 위한 임시 다목적 센터를 구축하고, 역외 국가 내 지역 차원의 보호조치 및 이주 기회 홍보를 적극화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집단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이라는 오명을 쓴 ‘더블린조약’을 2016년까지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중요

그러나 EU의 이러한 개선 노력이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민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은 이민 수용이 장기적으로는 EU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 실제로 유럽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민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EU 인구중 역외이민자의 비중이 7%이고, 경제활동인구 중 역외노동자의 비중도 6%로 그리 높지 않다(2013년 기준). 그러나 유럽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치명적인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게 될 전망이다. 우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민자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2020년대에는 노동가능인구가

⁶ “유럽에 온 아난민들... 伊는 받고 獨은 안 받는다?” (2013.10.12). “연합뉴스.”

⁷ Europe’s Deadly Immigration Policy. (2015.4.20). BloombergView.

⁸ Amnesty (2015.4.21). Europe’s sinking shame: The failure to save refugees and migrants at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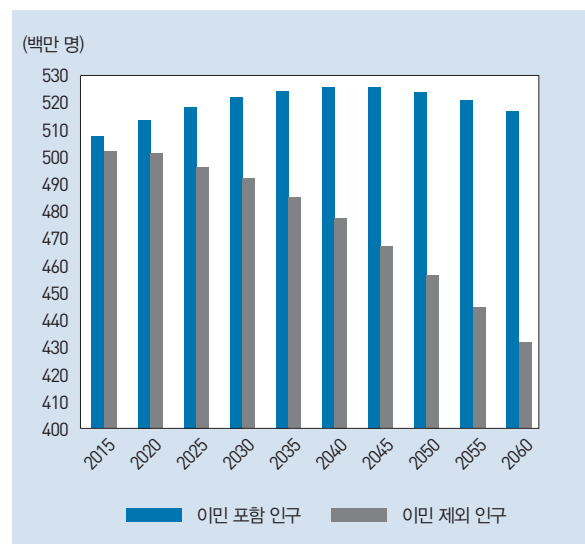
¹⁰ EU Commission (2015.5.23.).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¹¹ 인구와 GDP 규모는 각각 40%씩, 인구 100만 명당 기수용 망명 및 난민 규모와 실업률은 각각 10%씩의 비중으로 할당률을 조절할 예정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의 추산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1명당 경제활동 인구의 수가 2012년 4명이었다면 2060년에는 2명이 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산업구조 변화로 전 분야에서 722만 3,000명의 인력이 추가로 충원되어야 하고, 여기에 기존의 일자리 중 노동자 이탈로 발생한 일자리 7,323만 2,000명까지 고려한다면 2020년까지 총 8,045만 6,000명의 이민 노동자가 필요한 상황이다.¹²

★ EU의 인구변화 전망



자료: EU Commission (2014.), European Vacancy and Recruitment Report 2012.

EU는 이미 합법이민자 특히, 우수한 노동력을 역외로부터 대량 흡수하기 위해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조만간 기존의 블루카드 지침(Blue Card Directive)¹³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노동력 이동 패키지(Labour Mobility Package)와 기술에 관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Skills)를 제정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고학력 이민 노동자의 비중을 23% 확대하기 위해 향후 7년간 Horizon 2020, Erasmus+¹⁴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EU 회원국 국민 스스로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이 결국엔 EU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합리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이민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 될 것이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

Economic Impact of Brexit

As the Conservative Party led by Prime Minister Cameron won the UK general election held on May 7, 2015, concerns about a Brexit, which means Britain's exit from the EU, are heightened. German Bertelsmaan Stiftung has released a report analysing the impact of Brexit and it expects Britain's exit from the EU to have a huge impact economically.

영국이 EU 탈퇴를 원하는 이유

지난 5월 7일 영국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an Stiftung)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 탈퇴를 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EU 회원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민은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향후 이민자의 증가로 복지 부담이 늘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또한 민족 주체성과 자주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더불어 브뤼셀로 너무 많은 권력을 넘겨주어 생기는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와 EU에 지불해야 하는 높은 비용 등도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인들은 현재 EU 회원국으로서 자국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4년 말 시장조사 기관인 윈/갤럽 인터내셔널(WIN/Gallup International)은 11개의 EU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 중에는 EU 잔류에 대해 묻는 항목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64%가 EU 잔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에서는 73%가 잔류를 지지한 반면, 영국에서는 51%가 EU 탈퇴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영국인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의식해 캐머런 총리는 2017년 이전에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U 탈퇴에 따른 영국의 경제적 영향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의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기관들이 EU 회원국으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브뤼셀 소재 연구기관인 '오픈 유럽(Open Europe)'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영국이 2018년 1월 1일에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2030년 영국의 GDP는 탈퇴하지 않을 경우보다 2.3%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선의 경우는 1.6%의 추가 GDP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독일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센터(Center for Financial Studies)는 낙관적인 가정하에서도 영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직 EU에 미납한 예산을 포함한 실질 GDP 손실을 1.1~1.3%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동적효과, 즉 EU 탈퇴로 인한 생산성 저하까지 감안하면 6.3~9.5%의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영국이 지금까지 EU 회원국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고, EU가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EU와 관련된 정부 활동들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듯 EU 탈퇴로 인한 영향을 추정할 결과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 근거하고 있어 대략적인 수치일 뿐이다.

불확실한 요소들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베텔스만 재단의 의뢰로 독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IFO 연구소는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¹² Cedefop (2013.), Skills supply and demand forecasts.

¹³ 블루카드는 비EU회원국 출신의 고숙련노동자에게 주는 노동허가증

¹⁴ 2020년까지 진행되는 EU의 연구 및 교육 부문 혁신 프로그램



사용하여 GDP에 대한 영향을 계산했다.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고 있던 교역 특권을 상실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소프트 엑시트(soft exit)이다. 영국이 스위스나 노르웨이 처럼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무역 관련 비관세 장벽은 있지만 관세장벽은 없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딥 컷트(deep cut)이다. 이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영국과 EU 간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관세는 EU와 미국 간의 무역관계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영국의 탈퇴 후 고립(isolation of the UK)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영국은 EU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38가지 조약에서 규정한 모든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 비록 영국은 독립적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영국의 협상력이 EU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역관계를 정상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영국의 소비재 수출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수출 감소와 수입가격 상승은 영국의 경제활동 위축과 실질 GDP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영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 2013년 영국이 EU에 순 지불한 예산분담금은 약 864억 유로로, 영국 GDP의 약 0.5%였다. 만약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더 이상 EU에 이러한 분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득보다 손실이 더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U 탈퇴에 따른 영국의 수출입 영향

영국은 EU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영국 수출입의 50% 이상을 EU 회원국들이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 간의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양쪽의 무역 활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의 GDP 감소분은 0.6~3%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의 가치사슬과 상당히 통합되어 있는 화학, 기계공업, 자동차 산업 등은 대규모 손실을

★ 시나리오별 경제 충격

(단위: %)

구분	소프트 엑시트	영국 탈퇴 후 고립
영국	-0.63	-2.98
아일랜드	-0.82	-2.66
룩셈부르크	-0.48	-0.80
벨기에	-0.20	-0.96
스웨덴	-0.13	-0.48
네덜란드	-0.10	-0.35
독일	-0.08	-0.33
스페인	-0.08	-0.32
프랑스	-0.06	-0.27
오스트리아	-0.05	-0.18
EU(영국 제외)	-0.10	-0.36
세계	-0.06	-0.25

주: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와 탈퇴하지 않을 경우의 2030년 실질 GDP의 예상 대비
자료: IFO Institute, (2015), Brexit: Potential economic consequences if the UK exits the EU.
(Bertelsmaan Stiftung에서 재인용)

입게 될 것이다. 화학 산업은 약 11% 정도의 손실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금융서비스업은 약 5%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무역활동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쟁 압력이 약해져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될 것이고, 자본 이동이 전보다 자유롭지 못해 투자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 간 무역활동이 감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만일 국제경쟁에 대한 압력이 낮아지면, 회사들은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무역 감소의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의 실질 GDP가 2(소프트 엑시트)~14%(영국의 탈퇴 후 고립)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EU는 현재 많은 나라들¹과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중이며,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 EU는 협상 중인 국가들과 더 심도 있는 무역통합을 이룸으로써 긍정적인

성장 동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이러한 성장 동력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른 장기적 GDP 손실은 1.4(소프트 엑시트)~7.5%(딥 컷트)가 될 것이다.

타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영국의 EU 탈퇴는 주변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과의 무역활동 감소로 인해 27개 EU 회원국들의 실질 GDP는 0.1%(소프트 엑시트)에서 약 0.4%(영국의 탈퇴 후 고립) 감소할 전망이다. 독일은 영국과의 무역활동 감소로 인해 2030년 실질GDP가 0.1~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일랜드는 실제 수입이 0.8~2.7% 감소하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회원국들은 영국이 담당하던 예산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독일은 25억 유로, 프랑스는 19억 유로, 이탈리아는 14억 유로, 스페인은 9억 유로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와 전망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영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간의 경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의 탈퇴는 영국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EU전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영국으로서는 EU 예산 분담금이 절약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 소프트 엑시트의 경우에도 GDP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영국이 부담하는 EU 예산 분담금(GDP의 약 0.5%)보다 큰 규모다. 만약 심각한 경제적 격리와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경우, 영국의 GDP 손실은 더 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2030년에 영국의 실제 GDP는 EU에 남아 있는 경우보다 14% 더 줄어들 것이다.

¹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결론적으로 영국의 탈퇴는 영국경제는 물론이고, EU에게도 경제·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유럽 통합에도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베텔스만 재단의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를 막는 것이 영국과 유럽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Bertelsmaan Stiftung (2015), Brexit: Potential economic consequences if the UK exits the EU, Policy Brief, 2015/05.) ★

박민우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제6기 EU 아카데미 수료식 The 6th EU Academy Completion Ceremony

On May 27th, the last session of the 6th EU Academy for the spring semester of 2015 finished. The EU Academy was established in July 2011, as the Korea-EU FTA went into effect. The Academy has been giving lectures to students on not only the history and institutions of the EU, but also Europe's corporations, market environments, and many other issues.

Nine scholars who specialise in Europe, including Professor Yeonho Lee of Yonsei University and Deuk-Kab Kim of SERI provided lectures for the Academy. The lectures dealt with the EU's history, political system, its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crisis, the Eurozone, the EU'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and the EU's trade policies. The final lecture was on the EU's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s. For the last session,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Academy formed nine groups of three students each to give presentations on respective issues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about the EU. The students gave presentations on a wide spectrum of issues such as the civil war in Ukraine, and the EU's policies in language education, environment, and refugee migration. Twenty-four students finished the course at the completion ceremony on May 27th, and eight of these students have received excellence awards for their presentations.

EU 센터가 운영하는 제6기 EU 아카데미가 5월 27일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EU 아카데미는 2011년 7월 한-EU 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제1기 아카데미를 출범한 이래 EU의 역사 및 제도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 및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를 다루어왔다.

이번 EU 아카데미는 연세대학교 이연호 교수와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연구위원 외 일곱 명의 강연자들과 함께 하였다. 강연에서는 EU의 역사와 정치시스템, 제도와 경제위기, 유로존과 EU의 외교안보 및 통상 정책을 주제로 다루었고, EU와 한국의 정치에 관한 강연으로 마무리했다. 마지막 주에는 EU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조를 이루어 주제 발표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우크라이나 내전과 관련된 안보 이슈부터 그들의 언어 교육정책, 환경정책뿐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난민, 이민정책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6기 EU 아카데미는 총 24명의 학생들이 수료하였고, 이 중 8명의 학생이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제6회 EU 논문대회 개최 The 6th EU Student Symposium

The Yonsei-SERI EU Centre held the 6th EU Dissertation Competition on May 9th. This year's topic was "New Horizon for the European Studies in Korea: Widening and Deepening." The three dissertations that were selected as outstanding theses were introduced at the Conference on European Studies in Korea at Korea University on May 30th. Graduate students throughout Korea who have interest in the EU and Korea-EU relations have applied for this year's student symposium. The three outstanding dissertations were those with the topics, "The System Turnover in Europe: Theories and Experiments", "Europe's Standardisation Policies: Based on studies of Korea-EU FTA", and "The Effect of OSCE's Minority Race Policies on the EU's Political and Security Integration." The three students had a chance to introduce their abstract to a panel which was chaired by Professor Yeonho Lee, the Director of Yonsei-SERI EU Centre. Renowned EU scholars gave comments on the selected dissertations, and also provided helpful advice to encourage students to further pursue their studies on the European Union.

연세-SERI EU 센터는 5월 9일 유럽의 날을 기념하여 제6회 EU 논문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유럽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번 논문대회는 <기रो에 선 유럽 통합: EU의 확대와 심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3편의 논문은 5월 30일 고려대학교에서 진행된 한국유럽학회 유럽학연합학술대회 <대학원생 EU 논문대회 패널>을 통해 소개되었다.

유럽 통합과 한-EU 관계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논문대회에서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3편의 우수 논문이 선발되었다. 그중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정배(일반대학원 정의)의 <유럽에서의 시스템 전환: 이론과 실험>과 엄도영(국제대학원)의 <유럽의 표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 한-EU FTA를 중심으로>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Tilburg Law School의 임일형은 <OSCE의 소수민족 정책이 EU의 정치·안보적 통합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지원하여 우수 논문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이연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EU 논문대회 패널에서는 3인의 최종 선발자들이 각 논문의 요지에 대해 발표하고 유럽 전문 학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은 향후 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를 위한 조언을 얻기도 했다. 참여 학생들은 본 대회를 통해 확대와 심화의 기로에 있는 유럽 통합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유럽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제5회 EU 리더십 학생토론대회 The 5th EU Leadership Student Debate Competition

The Yonsei-SERI EU Centre, with the supervision of Yonsei University Leadership Centre, held the 5th EU Leadership Student Debate Competition. The debate competition aims to enhance students' critical reasoning and debate capacity that are required skills for future global leaders. Yonsei University undergraduates who have interest not only in Europe but also in diverse international issue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A total of eight teams were accepted for the finals.

The debate topics for the finals were "The EU's Identity," "Greece's exit of the Eurozone", and "the EU's down scale of Atomic Energy." Maastricht Team was awarded the first prize after an hour of fierce debate in the final round. Eight judges including Deuk-Kab Kim, the Vice-Director of Yonsei-SERI EU Centre and Professor Tae Dong Lee from Yonsei University's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carried out evaluations based on the content of the discussions, the style of the speeches, and the debate strategies of the teams.

지난 5월 26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연세-SERI EU 센터 주최, 연세대학교 리더십 센터 주관으로 제5회 EU 리더십 학생토론대회 본선이 개최되었다. EU 리더십 학생토론대회는 글로벌 리더로서 논리적 사고와 토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진 연세대학교 학부생들이 3인 1팀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논술을 통한 예선을 거쳐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오전 8강전의 주제는 <EU 정체성>이었다. 오후 4강전의 주제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였다. 2010년 이후 그리스에서는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유로존 탈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탈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간에 토론이 전개되었다. 결승전의 주제는 <EU 원자력 에너지 비율 축소>였다.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축소해야 하는가 혹은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승전에 오른 두 팀, 마스트리히트와 이운셋이 활발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교차조사, 자유토론, 반론제시 등으로 구성된 한 시간의 열띤 토론 결과, 마스트리히트 팀이 최종 승자로 결정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교수를 포함한 총 8명의 심사위원들은 주장의 내용, 스피치의 스타일, 팀 구성원의 전략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유럽의 날 및 연세 창립 130주년 기념 오찬 Europe Day and Yonsei University 13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Luncheon

A Commemorative luncheon celebrating Europe Day and the 130th anniversary of Yonsei University was held on May 15th at Yonsei University Guest House.

Professor Kap Young Jeong, the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gave welcoming remarks to the distinguished guests who were present at the luncheon. He mentioned that Yonsei University is now pioneering its "Third Foundation", and that the European countries' emphasis on social contribution and integration coincides with Yonsei University's efforts to expand the opportunity of learning to the marginalised in society. He also mentioned that Yonsei University will continue to widen its exchanges with the EU in terms of student and faculty exchanges and research.

16 European Ambassadors and representatives, including Tomasz Kozlowski, the Ambassador of the EU and Chang-Beom Kim, former Ambassador of Korea to the EU, attended the luncheon.

연세 창립 130주년과 5월 9일 유럽의 날을 기념하는 EU 회원국 대사 초청 오찬이 5월 15일(금) 오후 12시 연세대학교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다.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30년 동안 연세가 추구해온 성장과 발전의 역사를 통해 연세가 오늘날 세계 20위의 명문 사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연세가 제3 창학을 선도하며 일구어낸 외형적 성장을 넘어 이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등 사회공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통합을 위해 추구해온 가치와 공통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세가 유럽과의 교육·연구 및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함으로써 미래의 리더이자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토마쉬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EU 대사와 김창범 전 EU 대사를 포함해 총 16개 유럽 국가 대사 및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 외에 유럽 측 인사 21명이 참여하였다.





유럽의 날 문화행사 Europe Day Festival

On May 22nd, the Centre hosted the EU Festival day to celebrate Europe Day, which commemorates the founding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morning, 30 students watched the French musical, “Notre-dame de Paris” at the Yonsei University Central Library. Also, European sports such as fencing and rowing were introduced at the Global Sports Day event co-organised by Yonsei Universit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festival also featured a European food tasting event, where students tasted various European foods such as Spanish churros, Belgium fries, and Greek gyros.

연세-SERI EU 센터는 EU가 탄생한 ‘유럽의 날(Europe Day)’을 기념하여 교내에 EU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이 유럽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5월 22일 유럽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오전에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상영하였으며, 30여 명의 학생이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오후에는 국제처와의 공동 주관하에 연세대학교 글로벌 라운지에서 글로벌 스포츠 데이를 개최하여 프랑스의 펜싱, 영국의 조정과 같은 다양한 유럽 스포츠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유럽 음식 축제를 개최하여 벨기에 감자튀김, 스페인 튀리스, 그리스 기로스 등의 유럽 음식 시식행사를 진행하였다.